

이성의 힘

르네 데카르트, 「방법서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데카르트(1596~1650)는 17세기에 활동한 프랑스 철학자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천재의 시기, 휴머니즘의 시기 등으로 말하고 데카르트를 서구 근대의 문을 연 근대철학의 창시자라고 칭한다.

신의 가호와 은총 아래 인간의 행복을 자리매김했던 중세가 저물어 갈 즈음, 철학에서는 이성주의라는 사조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즉, 인간 이성의 자율을 인정하고 강조한 것이다.

말이 좋아 자율이지, 이 얼마나 고독한 말인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처럼 힘든 게 또 어디 있는가. 넘어져도 일으켜 주는 이 없이 스스로 일어나 어둠의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하는 상황,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근대인들은 이 자유와 고독의 시간을 향유해야만 했다. 끊임없이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이성의 능력을 신뢰했고 서로 연대했으며, 지금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영위하려고 했다.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삶은 이성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홀로 걷는 어둠의 길을 밝히는 것은 은총의 빛이 아니라 이성의 빛이라고 생각했다. 그 출발점에 데카르트가 있었다.

시작은 언제나 설레는 것만큼 낯설다. 설렘과 낯섦을 감내하며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선 강인한 힘이 요구된다. 새 시대가 왔다고 한들 어찌 구습이 단박에 사라지겠는가. 데카르트는 이런 사정을 「방법서설」(1637)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방법서설」은 진리를 인식하게 해주는 방법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포함해 제반 학문에 대한 생각 등이 담겨 있는 일종의 자서전이다. 학자가 아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은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과 제반 학문에 대한 생각이 담긴 일종의 자서전이다. 그는 ‘방법’이 우리 이성의 빛을 밝게 해주고, 밝은 이성에 따라 명석하게 생각하고 단호하게 행위하면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책은 아니다.

이 책은 재미난 탄생 배경을 갖고 있다. 1637년에 불어로 출판된 「방법서설」은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세상에 내보낸 책이다. 그는 이전에 이미 두 권의 책을 집필했지만 출판을 포기한 적이 있다. 하나는 「형이상학 논고」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론」인데, 이 두 책 모두 세상의 빛을 보기에는 시대가 녹록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갈릴레이가 재판에 회부된 때이기도 하다.

소심했던 데카르트는 출판을 포기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세상 민심을 떠볼 수 있는 책을 쓴다. 바로 ‘방법’이라는 말로 위장된 「방법서설」이다. 데카르트가 회심의

카드로 세상에 던진 전략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그는 1641년에 「성찰」이라는 문제작을 세상에 과감히 내보낸다.

데카르트가 생각한 이 책의 원제목은 ‘우리 본성을 보다 높은 단계로 승화시킬 수 있는 보편학에 관한 기획’이다. 아마도 ‘방법’이 우리 이성의 빛을 밝게 해주고, 밝은 이성에 따라 명석하게 생각하고 단호하게 행위하면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믿은 것 같다.

옷깃을 여미는 가을날 이 얼마나 가슴 뛰는 말인가. 그런 삶의 기술이 이 책 안에 있다니 말이다. 나의 경제



이현복

한양대 철학과 교수

1959년생 오스트리아 인스브르크대 철학박사. 「사회철학대개론」, 「포스트모더니즘과 철학」, 「인간의 조건과 실천철학」, 「인간 본성에 관한 철학 이야기」, 「로스쿨과 법학교육」, 「데카르트 성찰」, 「지식인의 종언」, 「포스트모던적 조건」 등의 저·역서가 있다.



특집

내년 나라살림, 어떻게 꾸려지나

- 16** 309조6천억원; 서민희망 · 미래대비 위해 쓴다
문성유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
- 18** 48조5,132억원; 친서민 교육복지 크게 늘린다
최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예산담당관
- 20** 3조3,709억원; 문화나눔으로 국민감성지수 UP!
안산영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실 서기관
- 22** 14조9천억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3조615억원
김인중 농림수산물부 기획재정담당관
- 24** 15조8천억원; 실물경제 활력과 미래성장 견인에 집중 투자
정동창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담당관
- 26** 33조5천억원; 복지지출 비중 역대 최고
황해석 보건복지부 재정운영담당관
- 28** 4조7,255억원; 저탄소 녹색성장에 주력
홍정기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 30** 19조8,563억원; '고용친화, 지역주도, 시장중심' 정책 확대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 32** 23조4천억원; 철도 중심 녹색교통으로 녹색성장 본격화
백승근 국토해양부 재정담당관

03 천천히 읽기
이성의 힘-「방법서설」
이현복 한양대 철학과 교수

인터뷰

08 학교를 자유롭게, 학생은 즐겁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대담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경제정책해설

- 52** 2013~2014년까지 균형재정 목표 달성
장영규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서기관
- 54** 2040년, 세계 5위 과학기술 선도국 만든다
박지영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 56** 한국 농업의 성공 노하우 개도국에 알린다
김중철 농림수산물부 국제협력총괄과장

그들은 바쁘다

58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
OECD와 아시아의 가교
김수영 부분부장





세계는 지금

- 38 '녹색성장' 선언을 넘어 구체전략 마련 중
김기준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 41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상이몽 'DDA 개발협상'
권혜진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정책 그 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 80 국내 가전 에너지효율, 세계 최고된 까닭은?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 81 "1등급 제품 만들려는 기업이지 강해졌죠"
성시내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 82 제품 경쟁력엔 긍정적... 짚은 등급강화는 부담
이장희 대우일렉 CTO 상무
- 83 효율등급 표시품목 더 늘려야
김영래 에너지관리공단 효율표준실 팀장

연중 기획

작지만 강한 기업

- 76 친환경 색종이 연필, 215년 연필의 역사를 바꾸다
박길서 굿필코리아 대표
- 78 성장과 도태의 갈림길, 적극적으로 신시장 모색해야
연유진 서울경제신문 성장기업부 기자

집중토론

- 44 쌀 수급 안정,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시공용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민연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달의 이슈

저출산 고령사회, 이렇게 넘는다

- 64 대한민국 인구 2019년부터 줄어든다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 66 맞벌이·베이비붐 세대가 정책의 초점
임인택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장
- 68 2015년까지 공무원 30%가 스마트워크 참여
강유민 행정안전부 유비쿼터스기획과장
- 70 "친구들이 오히려 부러워하더군요"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72 저출산 파고 넘으려면 미혼모 문제부터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73 [Q&A] 저출산 대책, 이것이 궁금해요!
박광진 유한양행 노조위원장
- 74 임금피크제, 젊은 직원들이 더 원한다
박광진 유한양행 노조위원장
- 75 고용유지와 성장을 함께 실현하는 방법
김정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칼럼

35 나라 밖 경제

인도의 놀라운 경제기적
조현주 KDI 경제뉴스분석팀 연구원

36 외신이 본 한국경제

美·日 언론, 한·EU FTA 체결에 긴장
이성신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연구원

50 마음 들여다보기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 대중의 '심리코드'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84 김 대리의 환경노트

녹색구매 촉진하는 환경라벨링
유복환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86 생애설계와 자산관리

목돈이 마련되면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라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

88 통계로 본 나라경제

'2010 인구주택총조사' 꼭 참여하세요
강창익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

90 그 길을 걸었다 - 순천만

삶의 길, 생명의 발
이용한 작가

94 시평

정부 부처 간, 지역 간 소통이 절실하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나라경제는 KDI와 14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나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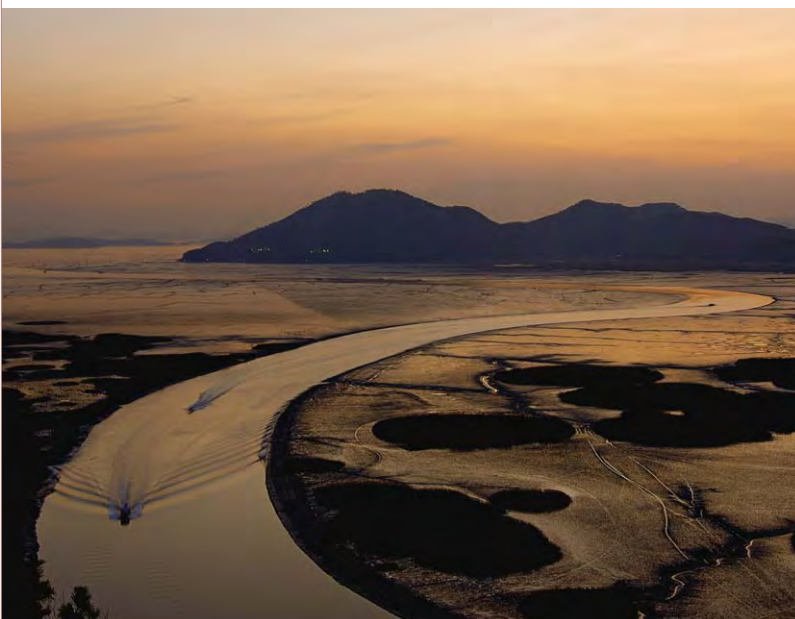
2010. 11 [제21권 11호 통권 240호]

발행 편집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편집인	현오식 KDI 원장 박철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문형표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편집주간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정보실장 대행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신민식 정책관리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이근재 과학기술정책과장 외교통상부 최철규 통상기획홍보관 행정안전부 조봉업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기획행정관리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 최명철 홍보담당관 지식경제부 전용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이창준 기획조정담당관 환경부 김영훈 정책총괄과장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재정담당관 국토해양부 김경욱 기획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조경식 기획재정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박세봉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김인 정책홍보팀장
편집간사	김보열 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관실
편집장 취재·편집기자	이재열 유성임, 안선경, 권기대, 표초희, 김솔나
배포	김경숙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27-8033 11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전화	02-958-4656
팩스	02-3295-0744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e-mail	nara@kdi.re.kr
발행일	2010년 10월 31일(매월 말일 발행) 제21권 11호 (통권 240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 (문화 라 04859호)
기사 문의	02-958-4634
광고 문의	02-958-4614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656
구독료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제작지원·인쇄	성우에드컴(주)
사진	이래스튜디오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
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 한방울, 누군가에게는 오아시스입니다.

생명의 시작인 물,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물 한 방울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희망이자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물 한 방울을 절약 할 때 여러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때 _ 2010년 10월 18일 오후 1시 30분

곳 _ 장관 집무실(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담 _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학교를 자유롭게,

학생은 즐겁게

1990년대 KDI 근무 시절부터 근 20여년간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오셨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크게 세 가지이다. 점수 위주 경쟁으로 인한 입시고통,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 그리고 서민의 사교육비 부담이 그것이다. 그동안 성적이라는 하나의 잣대만을 보는 대학입시 아래 학교교육만으론 대학에 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깊었다. 이 때문에 고액 사교육이 증가했고,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이 매우 컸다. 또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개발해 주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점수 위주의 경쟁이나 획일적 교육의 전제는 우리 아이들이 모두 같다고 보는 데서 연유한다. 이번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서로 다른 소질과 적성을 인정하고 이에 맞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고, 학생별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 벌써 기숙형고 150교, 자율형 사립고 50교, 자율형 공립고 58교, 마이스터고 21교 등이 지정돼 학생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단 위학교는 학교특성에 따라 20~50% 범위 내에서 자율적

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양하고 좋은 학교가 많이 생기는 것 외에 학교수업과 교사의 변화도 중요하다.

옳은 지적이다. 공교육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학교수업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수업의 변화는 좋은 선생님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연구년제를, 미흡한 교사에 대해서는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 수석교사제 확대 도입을 통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위학교에게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컨설팅 확대 등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교 다양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는 어떻게 추진되나?

고교 다양화 정책은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자율고와 기숙형고, 마이스터고가 근간이다. 그동안 이를 위해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별 특성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학교들을 지정해 왔다. 앞으로 고등학교의 수직적 서열화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대학 자율성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 중점 추진

1961년 대구 생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 코넬대 경제학 박사
1990~199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1994~1995년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1998~2004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998~2000년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2002~2003년 미 콜게이트대 석좌교수
2004~2008년 제17대 국회의원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간사
2008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2009~2010년 제2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2010년 8월~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하고 있는 부분이다.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2008년 이후 대학 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67개 자율화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43건은 규제 개혁을 완료했다. 17건은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앞으로도 대학과의 진솔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 한다. 또한 확대된 자율성과 함께 대학의 책무성 확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학정보공시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평가인증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교육정책이 자율과 경쟁에 무게를 둘 경우, 경쟁에서 뒤처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 배려가 있나?

지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은 ‘자율과 경쟁’ 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율과 책무’ 그리고 ‘배려와 지원’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 경쟁을 유도하고, 이와 함께 환경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 일관된 정책 기조이다.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가

지고 있는 것은 농산어촌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숙형고를 잘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기숙형고와 함께 (초·중)전원학교가 정착되면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떠나갔던 학생들이 벌써 농어촌 학교로 되돌아오고 있다. 또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선발모집 정원의 20%)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학비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공부 이외의 분야에 적성과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취업중심 학교로 집중 육성해 나갈 생각이다.

교육격차 문제를 풀어내기려면 유아교육 등 출발선상에

서의 배려도 있어야 한다.

동감이다. 교육격차는 조기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학년이 높아지면서 그 폭이 확대된다. 초기부터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부처 간 조율 중이지만, 교과부로서는 출발선상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교육, 특히 만 5세아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외에 특수교육, 청소년 위기 극복을 위한 ‘Wee 프로젝트’, 다문화가

정 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무료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 한다.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한국경제가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고등교육 종사자들의 자질·능력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

대학 부문의 경쟁력 제고 역시 큰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연구·봉사 등에서 탁월한 성과와 실적을 올린 교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2013년도

까지 단계적으로 국립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봉급을 차등해 지급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려 한다. 현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초·중등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좀 더 자세히 밝혀달라.

잘 아시다시피 내실 있는 공공교육은 교사의 질에 좌우된다. 교원양성과 임용·연수 등 전 과정에 걸쳐 초·중등 교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먼저 교원양성 단계부터 경쟁력 있는 교원을 길러내기 위해 교대·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교원 임용단계에서는 신규채용시험 체제를



개편하려 한다. 3차시험(심층면접)을 강화하고 합격자 사정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올해부터 전면 실시했다. 앞으로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도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모형을 개선하고, 확대 시행을 위해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평가결과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 등 교원연수 선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제는 과학기술 부문에 대해 얘기해 보자. 일각에는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방향은 무엇인가?

과학기술정책이 후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과 과학기술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 분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과 연구개발과의 연계 강화한 것 등이 그 예이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분야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다. 앞으로도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간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우수 인재들이 과학기술자가 되고 싶어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과학기술인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생각인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기능과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개편되는 국과위에서 범부처 과학기술 로드맵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을 배분·조정할 후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시키도록 하려 한다. 또한 전 R&D 사업의 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관리와 연계해 나갈 생각이다. 국과위가 개편된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부 자체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원천 연구개발 및 우주·원자력 등 거대과학 진흥에 중점을 둘 것이다. 물론 과학기술 인력양성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국과위가 성공적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과

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련한 '국과위 강화방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 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위상을 높이려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평가 등 전주기 R&D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국과위가 성공적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정책조정기구로서 위상에 맞는 실질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사무기구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법」을 개정해 국과위에 R&D 예산 배분·조정 및 평가 등 실질적인 기능을 부여할 생각이다. 또 교과부로부터 분리·독립된 사무처에 민간 전문가를 대폭 참여시키고, 공무원 소속은 국과위로 완전히 변경하게 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도 힘쓰겠다.

교육 부문뿐 아니라 과학기술 부문의 경쟁력 제고 역시 한국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이렇듯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책지원을 강화할 계획·방안은 무엇인가?

향후 R&D 투자를 세계최고 수준인 GDP 대비 5%까지 확대할 것이다. 이미 204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세계를 선도할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녹색기술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확충, 과학기술을 통한 국격 제고 등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

낮은 처우와 신분 불안정 등의 이유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등 과학기술 부문 종사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획기적인 사기진작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과기 부문 출연연구소가 미래성장동력인 원천기술과 인력양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사기진작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한 연구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먼저 과학기술인 연금이 있다. 과학기술인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지원금(과학기술발전장려금) 2천억원을

2013년까지 우선적으로 확보해 연금 수혜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출연(연)의 정규직 인건비를 내년까지 70% 이상 확보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줄 것이다. 출연(연) 선진화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에서의 사기진작책도 마련 중에 있다. 핵심적인 것이 '정년연장'이다. 현재 61세인 정년을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65세로 환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다. 이 외에도 총예산 대비 출연금 비중 확대, 과학기술인 공제회를 통한 복지 혜택 확대 등도 추진할 것이다.

다시 교육 부문을 살펴보자. 과중한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이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부담이 되고 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중산층 붕괴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난해 6월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같은 맥락이다.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창의·인성교육 강화, 교과교실제, 고교 교육과정에 기초·심화과정 도입 등을 통해 학생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학교자율화, 교원평가제, 학교정보공시제,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학교·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개선,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 등을 통해 입시제도를 선진화함으로써 입시제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EBS 교재 지원, 농산어촌 영어교육 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가려 한다. 대학 자녀에 대한 가정의 학비부담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09년 하반기에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그해 상반기와 비교해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올해 들어서는 학원들의 매출액 추이를 나타내는 학원생산지수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등 사교육비 경감이 가시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학부모가 체감하는 사교육비 및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벌써 현 정부 임기 후반기에 들어가는데 앞에서 언급하신 학교 자율화, 대학입시 개혁 등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꾸준히 개혁을 추진해 왔고, 이제는 그와 같은 제도들을 현장에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정권 임기 내에 모든 걸 다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겠지만, 큰 제도 변화에 뿌리가 내려져서 다른 정부가 와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
우리가 교육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교사들도 국민들로부터 과거처럼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개혁이 매우 힘들겠지만 긍정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장관께서는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셨나? 커서 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다(웃음). 공부도 공부지만 책을 아주 좋아했다. 커서는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교육계나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변화는 항상 힘들다. 예를 들어서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그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다른 것들도 하면서 입학사정관제도 같이 해야 하니까 힘이 든다. 창의·인성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정말 학교가 자유롭고 아이들이 즐거운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 변하지 않는 학교, 부작용이 많은 학교를 보면 제도가 더 개악됐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잘된 학교가 나오면 개혁은 계속 확산돼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우리가 교육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교사들도 과거처럼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매우 힘들겠지만 긍정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갔으면 한다. 4월



희망을 키워주는
직업방송!

www.worktv.or.kr

아직도 직업방송을 모르시나요?

희망을 꿈꾸는 당신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방송이 성공취업과
직업능력개발을 도와드립니다.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한국경제TV에서 시청가능)

인터넷 직업방송은 회원가입만으로
모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 참 좋~다!

대한민국을 밝게 비춰줄
따뜻한 금융, 햇살론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내일을
따뜻한 희망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햇살론이 뭔가요?

대부업 등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자 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제도로 정부와 지자체, 6개 금융회사가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입니다

대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업자,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입니다 (신용관리정보보유자 및 연체 중인 경우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창에

햇살론

* 아래 금융기관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NH 농협 1577-5522

새마을금고 1588-8801 / 1599-9000

신협 1566-6000 / 1644-6000

수협 1588-1515 / 1644-1515

산림조합 02) 3434-7222

Seed Money Bank 저축은행 SB 02) 397-8600

신용보증 해드림 신용보증재단 1588-7365

내년 나라살림, 어떻게 꾸려지나

정부가 내년도 살림살이인 '2011년 예산안'을 내놨다. '공정한 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 구현을 목표로 서민희망, 미래성장기반 확충, 건전재정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총수입은 2010년 대비 8.2% 증가한 314조6천억원이며, 총지출은 2010년 대비 5.7% 증가한 309조6천억원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서민들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 예산을 크게 늘렸다. 각 부처별 자원배분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를 정책담당자에게 들어봤다.



문성유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
m0318@most.go.kr

309조6천억원; 서민희망 · 미래대비 위해 쓴다



지난 9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2011년도 예산안의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년여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세계에서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생활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고, 향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예산안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내년 재정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총수입은 2010년도 예산 대비 8.2% 증가한 314조6천억원 수준이다. 총지출은 2010년도 예산 대비 5.7% 증가한 309조6천억

원으로 총수입 증가율(8.2%)보다 2.5%p 낮게 편성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수지(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는 GDP 대비 -2.0%로 2010년(-2.7%)보다 개선되도록 했고, 국가채무도 GDP 대비 35.2%(436조8천억원)로 2010년도 36.1%(407조2천억원)에 비해 개선된 수준이다. 재정적자 폭은 2012년 이후에도 연차별로 축소해 2013~2014년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생활 지원에 32조1천억원 반영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들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서민희망예산안'이다. 생애단계별·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과제를 선정해 올해(29조1천억원)보다 10.1% 증가한 32조1천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부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전체 영·유아의 양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에게 교육비 전액 지원하고, 산업체 현장연수 및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성적우수 장학금을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자 리주택 공급을 확대(18만호→21만호)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도 확대(8천호→11천호) 시행할 것이다.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중증 장애인 5만명에게 방문 간호·목욕 등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장애인 장 기요양서비스를 도입하고, 중증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확대(688가

구→2,500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기초수급자가 근로·사업 소득 상승으로 탈수급하는 경우에도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돼도 단기간에 민간기업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4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상담서비스(한국어 교육, 양육정보 제공 등)를 확대(2,240명→3,200명) 제공할 계획이다.

로봇·바이오 등 첨단융합산업 집중 육성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미래대비예산안'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8대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20조8천억원)보다 14.1% 증가한 23조7천억원을 반영했다.

우선, 시장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선점되지 않은 로봇, 바이오·신약 등 첨단융합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0대 핵심소재(WPM: World Premier Material) 개발 지원(1천억원 신규), SW기술(WBS: World Best Software) 개발 지원(900억원 신규) 등 세계 일류상품을 만드는 'World Best'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수출이 예상되는 원전·플랜트 등 차세대 수출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녹색성장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및 에너지 절약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태양광·풍력·원자력 등 녹색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다. 2012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2011년 예산안은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를 위해 서민생활 자원에 올해보다 10.1% 증가한 32조1천억원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올해보다 14.1% 증가한 23조7천억원을 계상했다.

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 수준으로 확대하는 계획에 따라 ODA를 1조6천억원으로 확대해 글로벌 리더십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엑스포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가브랜드 가치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고품질 종자자원 개발·보급, 한식 세계화 및 농식품 수출지원 확대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신기술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1인 창조기업 4천개를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제고한다. 소상공인의 창업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형 수퍼마켓(SSM) 확산에 대비해 골목수퍼 4천개를 현대식 점포로 개량할 계획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데에도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을 대폭 증액하고, 혁신도시 등 지역발전 프로젝트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에 대한 투자도 적극 지원한다.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위험근무수당 등을 인상해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강화했다. 또한 112 통합신고센터 확대, 범죄피해구조기금 신설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아껴 쓰고 꼭 필요한 분야는 차질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국고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 413개 사업에 대해 사업폐지 및 예산감액을 실시했다. 각 부처에 산재된 유사·중복 일자리사업을 전반적으로 정비(23개 부처, 202개 사업→22개 부처, 151개 사업)하고, 내년에는 올해 1월에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부처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부정·중복 수급으로 인한 낭비도 줄일 것이다. 국회



최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예산담당관
choi@mest.go.kr

48조5,132억원; 친서민 교육복지 크게 늘린다

교육과 과학기술은 본질적으로 미래 지향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미래를 보다 멀리 내다보고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 인재들이 창의적 지식을 생산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데 의미와 목적이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이란 단순히 무엇에 대해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아는 것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창출하고 조직화·체계화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정보까지도 포괄한다. 과거의 생산요소인 자본이나 노동처럼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축적되면서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창의·인성교육 강화 ... 글로벌 인재육성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은 미래 국가경쟁력 확충을 위해 창의성을 갖춘 우수 인력의 양성과 이러한 인력들이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독창적·과학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조직화·체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식격차에 따른 소득양극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창의·인성 교육의 강화, 친서민 교육복지 확충,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식격차에 따른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장학금의 수혜폭을 전년 5만7천명에서 8만 8,910명으로 확대했다. (사진) 지난 9월 2일 서울 배화여고 학생들이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실시하기 전 공부를 하고 있다.

위한 R&D투자 확대, 창의적 기초·원천 연구, 우주·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녹색교육 및 연구 활성화 등에 주력했다.

이러한 방향하에서 편성된 2011년 예산안은 2010년 45조1,462억원보다 7.5%(3조3,670억원) 증가된 48조5,132억원이다.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에 따라 전년보다 8%(3조744억원) 증가된 41조3,251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기초연구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등 투자 확대에 따라 전년보다 9.2%(3,118억원) 증가한 3조7,157억원, 사회복지 분야(사립학교교원 연금 지원 등)는 전년보다 0.5% 감소(-192억원)한 3조 4,724억원을 편성했다.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인성교육의 강화다. 초·중등단

계에선 문제해결력을 가진 인재양성을 위해 창의적 인재육성사업에 135억 원을 편성하고, 대학에선 점수 위주 학생 선발에서 잠재력·소질·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의 정착에 351억원을 계상했다. 이를 통해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 중심에서 탈피,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 수준의 고등학생용 및 성인용 영어능력평가시험의 개발·운영을 위해 83억원을 반영해 토익 등 해외영어시험 의존도를 낮추고, 사교육 경감 및 수학능력시험 등에 활용 예정이다.

둘째, 학교와 기업 간 원활한 연계다.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능교육과 조기 취업을 통해 기술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체제 개편 및 마이스터고 지원 등에 148억원, 전문대학 실무 기술역량 양성에 2,6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특성화고 학생(48만명)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데 3,159억원(지방비 포함)을 반영하고, 100% 취업지원을 위한 해외 인턴십 및 산업체 현장연수비 등에 510억원(지방비)을 편성했다.

셋째, 친서민을 위한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다. 지식격차에 따른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 장학금은 전년보다 82.3%(1,496억원) 증가한 3,313억원을 지원하고 수혜폭을 5만7천명에서 8만8,910명으로 확대했다. 근로장학금은 750억원(2만5천명),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은 대통령장학생·국가장학생·국가연구장학생 외에 전문대 우수장학생을 신설해 전년보다 9.6%(96억원) 증가한 1,095억원(1만7,310명 → 1만9,618명),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에 3,218억원(48만명 → 50만명)을 지원한다. 소득격차로 교육기회가 상실되지 않고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고려했다.

정부 R&D투자, GDP 5% 수준으로 확대


넷째,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급인재 양성이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에 2,370억원, 세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에 따라 전년보다 8%(3조744억원) 증가된 41조3,251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기초연구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등 투자 확대에 따라 전년보다 9.2%(3,118억원) 증가한 3조 7,157억원을 편성했다.

계수준 연구중심대학사업(WCU)에 1,240억원,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2,511억원, 지역 기초연구 활성화에 478억원,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에 1,325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잠재력 있는 학생들이 국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풀뿌리 기초연구 지원 확대다.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투자 등을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150% 확대한다는 목표에 따라 정부 R&D 총투자를 GDP 5% 수준인 16조6천억원(2010년 13조6천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확대된 R&D 예산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기초·원천 연구에 50% 수준을 집중 투자한다. 세계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공계 교수 및 연구원 등 일반연구자 지원에 3,980억원, 글로벌 리더 연구자 양성에 530억원, 창의성이 높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이룬 중견연구자 지원에 2,990억원 등 기초연구 진흥에 전년(8,456억원)보다 13.8% 증가한 9,620억원을 지원한다.

여섯째, 원천기술과 미래융합 첨단기술 투자 확대다. 국가 신성장 동력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 및 첨단 의료기반 기술개발 등에 1,011억원, 대구 신서, 충북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신약개발 지원센터에 266억원 등 원천기술 및 미래융합 첨단기술 분야에 전년(3,512억원)보다 9.9% 증가한 3,858억원을 반영했다.

끝으로, 우주기술 개발 및 원자력 수출이다. 우주 및 원자력 등 거대과학은 기술자립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용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를 정밀 측정할 수 있는 지구 저궤도 실용급 관측위성 개발 등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에 520억원,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 개발 및 기술개발에 315억원, 나로호 3차 발사에 180억원 등 거대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에 전년(2,670억원)보다 14.7% 증가한 3,062억원을 반영했다. 



안신영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실 서기관
postino9@korea.kr

3조3,709억원; 문화나눔으로 국민감성지수 UP!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규모는 2010년 예산 3조1,747억원보다 1,962억원(6.2%) 증액된 3조3,709억원이다. 이는 내년 총재정(안) 309조6천억원의 1.09%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의 후반기 정책기조인 ‘공정과 배려’, ‘소통과 통합’, ‘친서민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국민의 행복지수 및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고 사회통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대상 바우처 사업 대폭 확대

먼저,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운영을 위해 문화바우처 등 친서민 문화복지를 강화해 계층 간,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예술행사 관람횟수와 국내여행 참가횟수는 각각 4.8회, 6.1회인 반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0.5회, 3.5회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해 소외 계층·지역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에 올해보다 408억원 증액된 1,719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관람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245억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수강기회 및 용품을 제공하는 체육바우처 86억원, 저소득층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복지관광 48억원 등 3개 바우처 사업에 올해보다 약 4배 늘어난 총 379억원을 투입해 92만4천여명(올해 37만5천여명)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국공립·민간예술단체가 산간오지·복지시설 등에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소외지역에 우수문화도서를 보급하는 등 문화나눔 사업에도 263억원을 투입한다. 아울

〈표〉 문화체육관광부 부문 회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0년(A)	2011년(안)(B)	증감(B-A)	증감률(%)
지출재정계	31,747	33,709	1,962	6.2
예산	18,167	19,442	1,276	7.0
기금	13,580	14,267	686	5.1

러 지역의 문화예술시설 조성에 약 1,400억원을 지원해 도서관 52개소, 박물관 19개소, 미술관 9개소, 문예회관 17개소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2008년부터 폐교 위기의 초등학교 10개교를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해 전교생 1인 1예능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내년에는 25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밖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구 국군기무사령부 부지에 건립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700억원, 현 광화문 문화부 청사에 건립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256억원을 투입해 2012년까지 건립공사를 마무리한다. 남한강 인근에는 미술 창작·전시·유통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미술특구를 새롭게 조성해 향후 국내 미술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오페라·발레·현대무용 등 분야별로 국립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의 전당 등 국립공연장을 공연예술 활성화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해 622억원을 지원한다.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한글박물관’을 건립하고, 재외 한글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을 확충(26개소 → 36개소)하는 등 한글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해외문화원 3개소 신설 및 기존 20개 문화원 지원 확대,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10개소) 등 ‘대한민국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는

사업도 지원한다.

콘텐츠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핵심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최근 개봉했던 영화 '아바타'는 3D 입체영상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좋은 사례다. 문화부는 3D제작시설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 분야 3D시범콘텐츠 제작 등에 내년 17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애니메이션·드라마 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2012년까지 2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내년에 400억 원을 반영(국고:민간=4:6)해 이를 국내 콘텐츠기업의 제작능력 향상 및 해외진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한다.

아울러 e-스포츠 전용경기장,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등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문화기술 R&D에 71억원 증액된 580억 원을 편성했다.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한 교육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저작물의 창조적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저작권 관련 예산도 55억원 증액된 373억 원을 반영했다.

고부가가치 신성장 관광산업 육성

관광 분야에선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서울 G20 정상회의, 내년 이후 개최되는 국제체육대회 등을 계기로 '매력 넘치는 관광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고부가가치 융복합형 관광산업인 전시·컨벤션 산업, 의료관광, 공연관광 등을 육성하기 위해 282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습지, 수변자원 등 자연자원을 활용해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생태관광자원을 개발하고,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사업, 수변연계 문화관광 개발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 제주도 '올레길' 등에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보여행에 대한 수요와 관심 증가를 감안해 옛길·강길 등 다양한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는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동해안을 잇는 국내 최장(688km) 탐방로인 '해파랑길', 우리나라 대표적 옛길인 '삼남대로' 등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제작비 50억원 이상 집행하는 장편 영화를 대상으로 국내 제작 지출분의 20% 범위 내에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규모는 2010년 예산 3조1,747억원보다 1,962억원(6.2%) 증액된 3조3,709억원이다. 문화바우처 등 친서민 문화 복지 강화, 핵심 콘텐츠산업 육성, 한국형 관광콘텐츠 개발,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환급해주는 '해외영화 로케이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에서 95% 이상 촬영한 '꾸인문화'라는 태국영화가 지난 8월 개봉 후 태국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면서 태국 내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영화 로케이션을 유치하면 외래 관광객 증가, 국가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 분야는 국민체육센터 46개소, 운동장생활체육시설 170개소, 지방체육시설 99개소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동네 단위까지 조성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내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13 충주조정 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216억원 늘어난 1,42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내년 8월 완공되는 진천 국가대표종합훈련장에 690억 원을 투입하고, 대표선수 훈련일수를 올해 200일에서 210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기량을 연마해 2012 런던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67억 원을 투입한다. 학교 및 복지시설 등 8개 분야의 예술강사 4,900여 명을 파견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및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3,500여 명을 지원하며, 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 2,400여 명을 양성하는 등 1만2천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의 역할은 '경제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합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자본'이며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보물단지라는 점에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이라는 정부 재정편성 기조에도 잘 부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마음을 살릴 수 있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문화의 씨를 뿌리고 그 싹을 틔워 나갈 것이다. 문화경제



김인중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kij68@korea.kr

14조9천억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3조615억원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2011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17조6,616억원으로 올해 대비 2.3% 증가했다. 국가 전체 총지출의 5.7%에 해당한다. 그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14조9,092억원으로 올해 대비 2,354억원(1.6%)이 증액됐다. 국가 전체 재정증가율(5.7%)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복지·교육·국방 분야 지출수요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목적달성 사업 재원의 전환 등으로 추가소요 재원을 확보했다.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등에 2,797억원

내년도 예산은 농수산물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농어업인과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농식품 분야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쌀 수급안정 및 한-EU FTA 등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과 기상이변에 대비한 생산기반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첫째, 농식품 분야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수요를 고려해 첨단생산기술 및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등 R&D 예산을 올해보다 17.7% 증가한 2,79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농식품 분야 미래 전략산업인 종자산업과 생명자원 산업 육성에도 1,374억원을 투자한다. 이 예산은 민간 육종 인프라 등 종자산업 기반 구축과 동식물·미생물 등 생명자원 산업화 기반 조성에 투입된다. 또한 농어업 분야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열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해조류,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에너지화하는 데 1,487억원을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 재정에 의존해 온 농어업 분야 투·융자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 조성에 1천억원을 투자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은 농수산물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농어업인과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농식품 분야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쌀 수급안정 및 한-EU FTA 등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과 기상이변에 대비한 생산기반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둘째,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올해 6,716억원에서 내년 7,121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 식품산업 클러스터 등 수출지향형 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828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해외에 한국을 대표하는 플래그십(flagship) 한식당을 개설하고 한식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한식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해 310억원을 지원한다. 또 천일염·발효식품 등 고부가가치 전통식품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수출마케팅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338억원을 지원하고, 200억원을 신규 투자해 중국 등 주요 농식품 수출국에 수출 해외진진 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해 농어업 체질개선과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확충을 위해 4조9,495억원을 지원한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3,653억원을 투입해 우수농자재 공급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품목별 조직화를 통해 수급 및 마케팅 등의 문



정부는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농식품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 지난 10월 13일 제주시 피서픽호텔에서 열린 농식품 수출 진흥 워크숍 및 상담회에서 참가자들이 전시된 제주 농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제를 농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품목별 대표조직의 2년차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우농가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5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소비자의 농식품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 운영과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의 사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에도 457억원을 편성했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직불제 관련 예산은 실소요를 반영해 편성하되, 최근 쌀값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해 쌀소득변동직불금은 올해보다 3,128억원이 증액된 9,079억원으로 계상했다.

넷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을 위해 3조 615억원을 투입한다.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산지조직 육성과 규격출하·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산지유통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7,42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공영 도매시장 현대화 등 소비자 유통구조 개선에도 1,624억원을 투자하고 사이버 거래 등 직거래 활성화에 1,83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최근 가격하락 추세인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해 적정 수급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눈에 버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로 1,200억원을 편성하고, 농지매입·비축 예산도 올해 75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공공비축용 추·하곡 매입 등 양곡 수매·비축 사업에 1조

3,382억원을 투입한다.

다섯째,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1조6,443억원을 지원한다. 젊은 핵심인력의 농어촌 유치를 위해 농어촌 뉴타운 조성에 246억원을 편성하고, 농산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편의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312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체험마을·테마공원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개발과 노동교류 활성화를 위해 2,604억원을 반영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과 취학 전 영유아 보육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에도 2,788억원을 편성했다.

여섯째, 수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수산경영 개선 및 효율적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1조2,861억원을 투입한다. 수협 경영의 조기 정상화에 329억원을 지원하고, 과학적·체계적으로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사업단 설립에 신규로 533억원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조업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어항 기반 및 관리에 1,413억원을 투입하고, 노후 원양어선의 신규 건조에도 29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간척지 등 대단위 농업용지 개발 및 농업 생산기반 관리를 위해 2조6,043억원을 투자한다. 외곽 공사가 종료된 새만금 지구 내부개발 등 간척지의 미래지향적 개발을 위해 2,586억원을 편성했다. 물부족 시대에 대비해 농업·생활·환경 용수로 사용할 다목적 용수개발 및 농업용 저수지 뚝 높이기 등에 1조600억원을 지원하고, 재해예방 및 용수확보를 위해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에 3,200억원을 투입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식품 산업의 모습이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점과 정책 대상이 농어촌에서 국민 전체의 행복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면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가능한 예산소요를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자원하에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했다. [나의경제]



정동창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담당관
dcjung@mke.go.kr

15조8천억원; 실물경제 활력과 미래성장 견인에 집중 투자

최 근 우리 경제는 생산·수출·고용 등 실물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5% 내외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다. 다만 다소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경기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여전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투자·고용 등에서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한 민간의 자생력이 또다시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분야의 주무부처로서 우리 실물경제에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는 한편, 향후 새로운 산업질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미래 성장잠재력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재정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 선도, 신성장동력 창출, 전문 중견기업 육성, 부품소재, SW 등 미래를 위한 투자, +30억시장 등 새로운 수출기회의 적극적인 활용, 에너지·자원개발 역량 확충,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과 같은 핵심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 4조5,240억원

내년도 지식경제부의 재정(예산 및 기금) 규모는 15조 8,132억원으로 올해의 15조 5,128억원보다 1.9% 증가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예산은 정부 전체 R&D예산인 14조 8,740억원의 30% 수준인 4조 5,24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재정이 집중 투입되는 분야는 미래를 위한 투

내년도 지식경제부 재정 규모는 15조8,132억원으로 올해의 15조5,128억원보다 1.9% 증가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예산은 정부 전체 R&D예산인 14조8,740억원의 30% 수준인 4조5,240억원으로 편성됐다.

자,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무역·투자 유치, 에너지·자원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이다.

첫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부품·소재 등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를 강화했다. 그린수송시스템, 로봇, 바이오·의료기기, IT융합시스템 등 신성장동력 부문 예산은 올해 대비 19.3% 증가한 1조 9,629억원을 편성했다. 성장동력별 맞춤형 재정투입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은 올해 대비 16.2% 증가한 4,179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토대로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핵심소재 경쟁력 지원과 전략 분야 핵심기술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잠재력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히든챔피언인 전문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대비 207% 증가한 492억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신성장동력 장비 경쟁력 강화, 범부처 전주기적 신약개발, 국가기술자 산 활용, 스마트케어서비스,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경쟁력에 필수적인 SW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36.9% 증액된 2,020억원을 계상했다.

둘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성장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대응, 산업 부문 목표관리제 확산

등 수요관리 중심의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육성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태양광·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부문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23.9% 증액한 9,903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현재 27% 수준인 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을 2012년 32%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광물자원공사 출자에 1,800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주배관망 건설 등을 통해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서민부담을 경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을 통해 후진국형 LPG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늘렸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에 3,850억원

셋째, 중국·인도 등 신흥 +30억시장 부상, FTA 발효, 원전 수출 확대 등 새로운 수출기회 확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신흥시장 및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협력 지원 등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총 3,648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산을 올해 대비 8.3% 증가한 1,992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기존 또는 발효 예정인 FTA를 적극 활용하고 신규 FTA를 추진하기 위해 통상협력정보 서비스 기반구축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통상협상전략 수립 등의 예산과 원전 신규 수출에 따른 전략물자관리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넷째, 새로운 지역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에 3,850억원을 편성했다. 시·도 중심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은 내실화를 기하며 올해 대비 18.7% 감소한 2,688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산업단지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융합지구, 기업주치의센터 등을 신규 계상했다. 아울러 수도권 기업의 지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IT 대한민국의 다음 10년'(The Next Decade of IT Korea)을 주제로 한 '스마트 코리아 2010'을 마련했다. 사진은 '한국산업대전'에 참여한 김황식 국무총리(사진 중앙)가 뇌파를 이용한 자동차 작동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장면

방이전과 지방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지속적인 수요를 고려해 올해보다 27.3% 증가한 1,420억원을 편성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국가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기조하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추진돼온 사업의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 예산소요를 재예측해 사업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성과미흡 또는 집행부진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했다. 또한 재정지출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 재정지출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지식경제 R&D사업 구조는 융복합화 산업기술 트렌드와 산업정책에 대응해 전략적 R&D 재원 배분이 가능하도록 복잡한 칸막이식 사업구조에서 단순한 융합형 사업구조로 유연하게 바꿨다. 이를 통해 R&D사업 구조가 기능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고, R&D 예산의 전략성이 강화됐으며, 칸막이 제거를 통해 융복합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이후에는 효율적 재정투자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를 통해 녹색성장과 기술혁신·지식주도형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



황해석
 보건복지부
 재정운영담당관
 hshwang5698@hanmail.net

33조5천억원; 복지지출 비중 역대 최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 대한 정부안이 지난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올해 대비 8.0%가 증가한 33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지출 증가율 5.7%는 물론 복지 분야 증가율 6.2%에 비해 서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규모다. 정부 전체 총지출(309조6천억원) 대비 복지지출 비중(27.9%)과 복지부 소관 지출 비중(10.8%)이 2010년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 부분은 서민·중산층 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복지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20~30대 맞벌이 부부의 보육 문제, 30~40대 학부모의 자녀안전 문제, 어렵지만 열심히 일해 자립하고자 하는 저소득계층 및 은퇴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와 의료 문제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친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과제에 대해 소개한다.

무상보육, 전체 영유아 가구의 70%까지 확대

대한민국의 20~30대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한번쯤 하는 고민이 아이들의 보육 문제다. 경제적 수준에 비해 적지 않은 지출을 차지하는 보육비도 문제고 그렇다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충분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젊은 부모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은 덩크(Dinks; Double Income No Kids,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의미)족 같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정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올해 대비 8.0%가 증가한 33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20~30대 맞벌이 부부의 보육 문제, 30~40대 학부모의 자녀안전 문제, 저소득계층 및 은퇴 노인들의 일자리와 의료 문제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2009~2011년 정부 총지출 및 복지 분야 지출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2009년		2010년	2011년(안)
	본예산	추경		
총 지출(A)	284.5	301.8	292.8	309.6
복지 예산(B)	74.6	80.4	81.2	86.3
비중(B/A, %)	26.2	26.6	27.7	27.9
복지부 예산(C)	28.4	29.6	31.0	33.5
비중(C/A, %)	10.0	9.8	10.6	10.8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무상보육(0~4세아)을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체 영유아 가구의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맞벌이 가구에 대해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월소득인정액 600만원까지 확대(낮은 소득의 25% 차감 → 합산소득의 25% 차감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보육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간 관행처럼 지속된 국공립 선호 현상을 바꾸고자 한다. 보육시설 평가 인증을 강화해 우수 민간보육시설 1천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국공립 보육시설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최근 등·하교 길, 공원 및 놀이터 등에서 빈발하고 있는 아동 대상 범죄로 인해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 '노인 자원 봉사대'를 확대해 학교 주변 순찰 및 등·하교 길 안전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학교 주변 도로에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맞벌이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저학년 '나 홀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역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 현실화를 추진할 것이다.

장애인 분야에 있어선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예산을 증액(133억원 → 258억원)했다. 특히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2011년 10월 조기 도입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강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10여년 동안 저소득층의 생계·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정책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많은 정책적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일부에선 저소득층의 자립보다는 생활안정에 중점을 둔 나머지 탈수급을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정책의 초점을 탈수급 및 탈빈곤에 두고 사회서비스 등 취업유발효과가 높고 사회적 수요가 큰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규제완화 및 뷰티·U헬스 등 유망서비스를 집중 육성, 보건복지 분야의 신규 비재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기움통장을 올해보다 확대하고, 근로장려금을 인상(15만원 → 21만원)하는 등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탈수급 이후에도 2년간 교육 및 의료급여를 탈수급 가구에 지원해 자립 초기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30만개의 고령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7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0 부산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노인들이 이력서를 작성하는 모습

다음으로 고령화시대의 노인 일자리 문제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등 노령 근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재정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30만개의 고령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공익형·복지형 일자리를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직능시니어클럽 활성화, 시니어 인턴십 도입, 고령자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또한 전문직 은퇴 노인의 경력 및 전문지식을 사회봉사에 활용, 존경받는 노인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10만 노인 전문봉사자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1만 노인자원봉사 지도자' 양성과 '5천 노인자원봉사 클럽'을 육성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복지 분야 외에도 보건 의료 분야에 있어서 내년은 많은 변화와 투자가 예정돼 있다. 특히 항암제 개발 등 보건 의료 R&D 투자가 대폭 확충(3,092억원 → 3,356억원)되고, 공공 의료 확충 및 결핵에 대한 집중적 재정투자(149억원 → 451억원)가 이뤄진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한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확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내년을 발판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내외



홍정기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jkhong@me.go.kr

4조7,255억원; 저탄소 녹색성장에 주력



지난 10월 12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인천시 서구 중합환경연구단지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시범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개발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성능과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전기자동차 실증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해 왔다.

우 리나라 기후가 급변하고 있다. 올해 신년 벽두의 폭설과 여름철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지금부터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2080년에는 지구온도가 평균 섭씨 3도 이상 오르고, 해수면이 높아져 해안지대의 30% 이상이 침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UN은 2050년에 20억명 이상이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해 국가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집중 투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토환경 훼손과 자연자원 고갈, 물·공기·토양 오염 등 일부 부작용도 있었다. 환경 부문은 이를 해결하고자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역점 투자해 왔다. 그 결과 오염물질 사후처리 분야의 시급한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했다.

앞으로는 환경투자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그것.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물 공급(수량)뿐만 아니라 맑고 건

강한 물 환경(수질·수생태)을 조성해 풍부한 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물 분야는 생명·생태 살리기에 중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탄소 기술과 제품을 적극 개발해 전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환경부는 2011년도에 '생명·생태가 살아 있는 물 환경 조성'과 '환경산업·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역점 투자할 계획이다.

201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은 2010년 예산 4조 4,832억원 대비 2,423억원(5.4%) 증액된 4조 7,255억원이다. 부문별로는 상·하수도가 2조 5,32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53.6%)을 차지하고 수질 5,300억원(11.2%), 자연보전 3,991억원(8.4%), 대기보전 3,021억원(6.4%), 환경정책 2,962억원(6.3%), 폐기물관리 2,637억원(5.6%) 순이다.

폐기물자원화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

환경부 소관 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은 당초 마스터플랜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하고(2010년 1조 3천억원 → 2011년 1조 원), 전국의 주요 하천·호소 등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7,650억원 등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에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산업을 전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톱(Top) 환경기술 개발에 중점 지원하는 등 환경 R&D 투자를 확대한다(2010년 2,142억원 → 2011년 2,355억원). 또한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환경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2010년 54억원 → 2011년 80억원).

201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은 2010년 예산 4조 4,832억원 대비 2,423억원(5.4%) 증액된 4조 7,255억원이다. 내년에는 '생명·생태가 살아 있는 물 환경 조성'과 '환경산업·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역점 투자할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4월 시행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2011년 59억원 신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기반을 마련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2011년 87억원).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지자체의 적응 능력 배양에도 투자를 강화한다(2011년 300억원). 또한 단순 소각·매립되던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폐기물자원화에 투자를 지속 확대(2010년 758억원 → 2011년 779억원)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석면·아토피 등 각종 환경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분야에 투자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구제기금에 정부 출연금 60억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하는 사업에도 28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일반가정·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천식·아토피 같은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친환경 건강도우미 사업도 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넷째, 생태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현명한 이용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준비에 86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자연보전과 이용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2010년 40억원 → 2011년 77억원).

환경 부문 투자는 사전 예방적인 투자가 효율적이다. 이미 악화된 환경을 사후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선 몇 배의 투자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환경 분야에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의 경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jpcrystal@hanmail.net

19조8,563억원; ‘고용친화, 지역주도, 시장중심’ 정책 확대

지난 5월 KDI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히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내년 4% 중반대의 건실한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실업률도 3.5% 수준에서 안정되고 취업지수 증가도 연평균 20만명 내외에 달해 노동시장은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청년 및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2010년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실업률은 3.3%인 반면 청년실업률은 7%이며, 취업애로계층도 180만 7천명 수준으로 그 규모가 쉽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

노동시장 안정과 관련해 중요한 요소인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복수노조 제도를 둘러싸고 노사 간에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확대 개편

이상의 정책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고용노동부의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하에 편성했다. 우선 고용정책 분야에선 ‘고용친화, 지역주도, 시장중심’으로 고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노동시장은 ‘저성장, 저고용, 고실업’이 통상화돼 활력이 저하되고 이중구조가 심화돼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



지난 9월 10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10 대한민국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컨설팅을 받고 있다.

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7월 5일자로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개편돼 새롭게 출범했다. 이를 계기로 일자리, 지역, 민간 중심의 시각에서 관련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여전히 문제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비롯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시스템도 시장친화적·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노사정책 분야에선 전임자 및 복수노조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작업장 혁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적인 선진 노사관계를 지원해 나가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지원과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계

201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계 규모는 19조8,563억원으로 2010년 대비 2,203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총지출 규모는 12조6,671억원으로 2010년 대비 3,736억원(3.0%)이 증가했는데, 이는 청년 실업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을 대폭 강화한 데 기인한다.

규모는 19조 8,563억원으로 2010년 대비 1.1%인 2,203억원이 감소된 수준이다. 그러나 총지출(총계에서 기금전출금 및 기금 여유자금(적립금) 등을 제외한 실 지출소요) 규모는 12조6,671억원으로 2010년 대비 3,736억원(3.0%)이 증가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예산은 1조 3,231억원으로 2010년 대비 1,480억원(12.6%)이, 기금은 11조3,440억원으로 2010년 대비 2,256억원(2.0%)이 증가돼 예년에 비해 그 증가폭이 상당히 커졌다. 이는 청년실업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을 대폭 강화한 데 기인한다.

첫째, 고용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고용친화적인 국경운영을 위해 주요 정책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사업(20억원)을 신규로 시행한다. 지역 중심의 일자리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군 단위의 고용노동 통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일자리공시제를 시행하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324억원)도 대폭 확대했다. 지자체 중심의 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과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1,478억원)을 확대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진흥원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청년고용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이다. 청년인턴제(1,934억원)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및 창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을 현장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379억원), 위기 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사관학교(15억원) 등을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밀집지역 고용센터에 잡영프라자(Job Young Plaza, 92억원)를 신규로 설치해 대졸 청년층에게 맞춤형·현장형 취업상담 및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촉진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취업성공패키지(377억원)를 확대 개편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취


업촉진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취업장려수당(353억원)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실직근로자 등의 조기 노동시장 복귀지원 등을 위해 구직급여(3조 3,772억원), 취업촉진수당(2,150억원), 체당금(2,662억원) 예산을 적정히 확보

해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사회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모성보호육아 지원(4,111억원), 직장보육시설 지원(401억원),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97억원) 등을 통해 모성보호와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조전임자·복수노조 연착륙을 지원

셋째, 수요자·기업 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의 구축이다. 신규 실업자 등에 대한 훈련을 계좌제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수요자 중심의 훈련방식으로 추진(3,088억원)할 것이다.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등을 위해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1,495억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4,247억원),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1,229억원) 등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넷째, 생산적 선진 노사관계 정착 및 산재예방 강화이다. 작업장혁신사업(70억원)과 선진 노사관계전문가 육성사업(9억원) 등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해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사업(36억원)을 확대하며, 근로시간 유연화·단축사업(9억원)을 신규로 시행할 계획이다.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조기복귀 촉진을 위해 산재보험급여(3조8,548억원)와 산재근로자 재활(459억원) 예산도 확충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650억원),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기술 지원(575억원) 등을 확충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희망을 되찾고,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더 잘살 수 있는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매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기본권 보장'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백승근
국토해양부 재정담당관
sgpaek@hotmail.com

23조4천억원; 철도 중심 녹색교통으로 녹색성장 본격화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 규모는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 사회복지 4개 분야에 총 23조 3,767억원이다. 2010년 예산 24조1,204억원보다 7,437억원(3.1%) 감소한 수준이다. 주택(복지 분야) 부문과 해양환경(환경 분야) 부문의 예산을 제외한 국토해양부 SOC 분야 예산은 23조원으로 이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조2,800억원이 투입되며, 도로·철도 등 여타 SOC에 19조7천억원이 투자된다.

SOC 예산 규모는 200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정(2009년), 추경(2008·2009년) 등을 편성하면서 한시적으로 증액됐으나, 2011년은 경제 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해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경제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경제위기 이전 규모인 18조원보다는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소관 국민주택기금은 국회에 제출되는 2011년 지출 규모가 17조8천억원으로 2010년 지출 규모인 16조8천억원보다 1조원(6.0%) 증가했으며, 이 중 보금자리주택에는 9조5천억원이 투자돼 2010년 8조8천억원보다 7천억원 증가했다.

4대강 살리기 본사업 내년까지 완공

국토해양부는 2011년도 예산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철도 중심 녹색교통으로의 투자전환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본격화하는 한편, 서민주거 복지 확대,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성장동력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예정이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비해 4대강 살리기 본사업을 내년까지 완공하고, 4대강 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종합 정비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한 수자원 부문의



11월 1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인 대구-부산 개통으로 서울-부산은 2시간 18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 2020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KTX 고속철도망이 구축될 경우 2시간 안팎이면 전국 주요 도시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예산을 올해 5조1천억원보다 1천억원 증액한 5조2천억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홍수·가뭄 등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개선과 함께 이수·치수·문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을 구현하기 위해 철도 투자를 증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철도 부문 예산을 2010년 4조2천억원보다 7.1% 증가한 4조5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해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을 지원하고, 일반철도를 고속화해 철도의 간선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개량 등 운영 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할 것이다. 도로 부문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완공 위주로 투자하며, 확장보다는 기존 도로의 보강과 안전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녹색교통 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그린홈,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 등 녹색도시 조성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와 교통복지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서민주거 복지 구현을 위해 주택 부문 예산을 2010년 1,800억원보다 17.4% 증가한 2,114억원을 편성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투자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저소득층 등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국민주택기금 지출 규모를 올해 대비 1조원 증액한 17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과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 의무) 보상을 지원하고, 철도역사 내 이동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다.

건설·교통·해양 R&D 분야 투자 확대

넷째,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발전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012년 5월 개최 예정인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박람회장 조성 등 본사업에 2010년 3,350억원보다 21% 증가된 4,055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성장 거점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차질 없이 건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역성장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추진 중인 30대 선도 프로젝트 투자소요를 적극 반영하고, 연안침식 방지 등 연안환경 개선사업과 해양생태계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 규모는 총 23조3,767억원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철도 중심 녹색교통으로의 투자 전환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본격화하는 한편,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성장동력 창출 등에 중점을 둘 것이다.

보전·복원 등에 최대한 지원한다. 산업단지 부문에도 2010년 8,893억원보다 2.1% 증가한 9,083억원을 편성해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적기 개통을 통해 기업의 물류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건설·교통·해양 R&D 분야의 투자 규모를 처음으로 6천억원이 넘게 편성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 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하고, 국토해양 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그 밖에 서민생활지원·녹색성장 등을 위해 2011년 신규 편성된 국토해양부 소관 이색사업들이 있다. 공항철도연계시설 확충사업은 경의선과 공항철도를 연계해 인천공항까지 KTX를 운행함으로써 인천공항철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이용객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2011년에 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소형항공기 비행안전체계 구축사업은 경비행기 등 소형항공기에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실시간 운항정보를 제공해 항공기 안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6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광역버스 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 좌석버스와 광역급행버스 간에 요금정산이 가능하도록 광역급행버스의 요금체계를 현 수도권통합요금제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5억원을 계상했다.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사업은 건물 유형별로 에너지 정보 통계시스템을 구축해 건물의 구조·형태·노후화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특성을 DB화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52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에 4대강을 비롯한 주요 SOC 사업과 신성장동력 확충사업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의 토대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이다. 4월

보금자리 **공**



두부 한모, 고등어 한 마리, 파 한단을 사더라도
깎고 또 깎으며 알뜰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말기가 되어가는 전셋집 걱정에 한숨 쉬곤 하셨는데
이제 '보금자리주택' 덕분에 한시름 놓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를 보니 마음이 한결 행복해집니다.

보금자리주택 - **new**

보금자리주택 투기는 사회의 공적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다양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보금자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자연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단지를 건설하고 삶의 여유를 지원하는 복합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름입니다



'나라 밖 경제'는 해외 주요 경제저널의
유익하고 흥미있는 기사를 소개하는 난입니다.

인도의 놀라운 경제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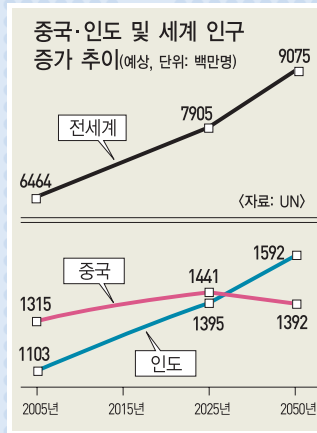
'India's surprising economic miracle', Economist, October 2

지난 10월 3일 인도 델리에서 英 연방경기(4년마다 벌어지는 영국 연방국가 간 종합스포츠 대회)가 개막됐다. 끔찍한 화장실 시설, 텅텅을 퍼뜨리는 모기가 엉망거리는 물웅덩이, 허술한 치안 등으로 인도의 개최 준비상태에 관한 긍정적 평가는 찾기 어려웠다. 일각에서는 인도가 최상의 경기장을 건설하고 셔틀버스가 정시에 운행되도록 하는 효율적 국가들처럼 대회를 운영할 수 없으며, 이는 인도가 영원히 이류 국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英 연방경기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에도 불구하고 인도경제는 비교적 우수하다. 인도경제는 올해 8.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장률은 늦어도 2013년까지 중국 경제성장률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인도가 대규모 경제국 가운데 향후 25년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인도가 곧 중국을 앞지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우선 인구통계학적 이유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노동력은 곧 고령화될 것이며 수년 안에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한 자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인도에서는 어떤 정부도 그처럼 억압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인도는 젊은 노동력이 증가하는 축복을 받고 있다. 노령자 부양률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앞으로 한 세대 동안은 그 수치가 유지될 것이다. 인도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경제 기적을 가져온 원동력인 인구통계학적 배당효과로부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인도를 낙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종종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는 인도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한국의 경제발전을 더디게 만든다는 견해가 최근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는 단점이 있다. 선거로 집권한 정부는 이기



적인 당파와 이익집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가장 시급한 결정조차도 끝없는 논쟁으로 지연되곤 한다. 반면 중국은 민주주의에 따른 문제를 겪지 않는다. 중국의 기술관료들이 댐 건설, 도로 포장 혹은 마을 이주 등을 결정하면, 댐이 건설되고 도로가 포장되며 마을은 원래 터에서 사라진다.

인도가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였다면 英 연방경기가 조금 덜 혼란스러웠겠지만, 인생에는 배드민턴이나 리듬체조 외

에도 많은 것이 있는 법이다. 인도의 경우 정부는 약할지라도 민간 기업은 강력하다. 인도의 자본주의는 맹렬하게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수백만 개의 기업들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인도가 '규제왕국(licence raj)'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경제를 개방한 1990년대 초반 이후 인도의 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 같은 비밀주의 및 감시 문화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가 만연하지 않아 지식기반산업은 중국보다 인도 진출을 선호한다.

현재 인도의 문제는 고통스러운 만큼 가시적이다. 인도의 도로는 형편없고 대중교통은 수치스러운 수준이다. 인도 기업들은 예비 발전기, 급수처리 시설, 셔틀버스 등의 인프라를 스스로 구축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빈곤층을 위한 값싼 사립학교 급중에 일부 힘입어 인도의 식자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에는 크게 못 미친다. 중국과 인도 가운데 사업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마도 중국을 택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더욱 지식집약형 경제가 될수록 인도의 이점은 커질 것이다. 그것이 델리의 교통체증에 갇혀 있으면서도 곰곰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정리 조현주 KDI 경제뉴스분석팀 연구원

'외신이 본 한국경제'는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한 해외의 생생한 반응과 평가를 소개하는 난입니다.

美·日 언론, 한·EU FTA 체결에 긴장



지난 10월 6일 벨기에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브뤼셀 EU 이사회 본부에서 헤르만 판롬파워(가운데)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오른쪽) EU 집행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 회담과 한·EU FTA 서명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10월 6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FTA에 정식 서명했다. 미국과 일본의 일부 언론은 한·EU FTA로 자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자신들의 뒤쳐진 FTA 정책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자성의 기사를 실었다. 한편 글로벌 환율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러 외신들은 11월 개최되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에 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인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가져온 배춧값 폭등 소식도 여러 외신들의 관심사였다.

WSJ, “한·미 FTA 막는 어리석은 美 보호주의자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언론은 한·EU FTA 정식 서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보도했다. 우선, EU 국가인 영국의 *Financial Times*(이하 FT)는 10월 7일자 '세계무역에 한 기차 서광 비추는 한·EU FTA'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09년 한국과 EU 간 교역규모가

743억달러에 달했다며 한·EU FTA는 규모 면에서 비교 가능한 FTA가 호주·미국, 호주·중국 FTA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에 속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세계 다자무역 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FT는 한·EU FTA로 EU와 한국 기업들이 각각 190억달러와 13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며 유럽의회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서둘러 한·EU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언론들은 한·EU FTA 체결을 자신들의 뒤쳐진 FTA 정책을 되돌아

보는 기회로 삼았다. 한·미 FTA는 약 3년 전 체결 후 미국 내 일부 보호주의자들의 반대로 비준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미국 *Wall Street Journal*(이하 WSJ)은 10월 8일자 사설에서 어리석은 美 보호주의자들만 아니었다면 한·미 FTA는 벌써 발효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아쉬운 속내를 드러냈다. WSJ는 향후 20년간 한국과 EU의 교역규모가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두 배 확대될 것이라는 EU 집행위원회의 추정치를 인용하며, 한·EU FTA가 미국 기업들의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닛케이도 10월 8일자 사설을 통해 한·EU FTA가 발효되면 인구 5억명의 거대 시장 EU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지만 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남게 돼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닛케이는 세계 각국이 수출 확대를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뒤쳐진 FTA 전략을 서둘러 재구축하지 못한다

면 일본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닛케이의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단행한 규제개혁과 농업개혁을 일본이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WSJ는 10월 7일자 분석기사에서 한국이 FTA 분야에서 경쟁국인 일본을 앞서면서 한국으로서는 환호할 일이 또 하나 생겼다고 보도했다. WSJ는 일본의 對EU 및 對美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EU, 미국과의 FTA를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반면 일본은 EU, 미국과의 FTA 협상이 요원하기만 하다며 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받게 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는 일본이 FTA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농업계의 반발 때문이라고 전했다. 농업계의 우려를 완화시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은 한국이 미국, EU와의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계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내렸던 것과 같은 단호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 집중 논의될 것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환율분쟁이 전 세계 환율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은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FT는 환율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주목다짐이 수그러들지 않아 한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싸움을 주재하게 됐다고 전했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금융안정망 마련, 은행 자본규제안 합의 도출, 한국식 성장모델의 전파 등을 계획했던 한국인들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G20 서울 정상회의가 환율갈등 해소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외신도 있었다. Economist는 10월 16일판 기사에서 현재의 환율분쟁을 두고 미국과 중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환율분쟁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에 압력을 유지해나갈 기회로 G20 서울 정상회의를 활용

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WSJ는 10월 12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불균형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중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G20가 주요 경제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던 G8을 계승할 만한 포럼임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 당국자들이 글로벌 환율 문제 해결에 애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14일 인천시 남구청 운동장에서 열린 배추 수급 안정 직거래 장터를 찾은 시민들이 배추 구입 차례를 기다리며 길게 줄 서 있다.

Economist, “채소계의 페라리로 부상한 배추”

배춧값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던 10월 초 외신들은 배춧값 폭등과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난감한 상황들을 자세히 보도했다. Economist는 10월 9일판 기사에서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과 이에 따른 배추 사재기 등으로 배춧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인들에게는 북한의 권력승계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배춧값 폭등이 최대 관심사라고 전했다. Economist는 1년 전에 2~3천원이던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만1천원을 넘어 돼지고기보다 비싸졌다고 전하면서 배추가 ‘채소계의 페라리’로 부상했고 김치도 ‘금치’로 불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WSJ는 10월 15일, 배춧가격이 폭등하면서 김치값을 따로 받는 식당이 생기는가 하면 울해 김장을 하지 않겠다는 집도 나오는 등 한국인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리경제

정리 이성신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연구원

‘녹색성장’ 선언을 넘어 구체전략 마련 중

OECD의 녹색성장 논의는 2009년 6월 우리나라가 각료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주도한 ‘녹색성장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본격화됐다. 환경에 유해한 과거의 경제성장패턴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우려와 기후변화가 초래할 잠재적인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물론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이후 범부처적인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녹색성장전략 5개년 계획 발표, 「녹색성장 기본법」 발효 및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출범을 통해 OECD에서는 녹색성장이 한국의 브랜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녹색성장 선언문’ 한국이 주도 ... 구체적 녹색전략 수립을 각국에 권고

각료회의 의장국을 맡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채택한 녹색성장 선언문은 선진 30개국뿐 아니라 OECD가입 준비중이었던 칠레·이스라엘·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 등 신흥경제국들이 동참했다. 단기적으로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녹색성장전략 추진 노력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담고 있다. 이 선언문은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를 막고, 에너지 안보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하는 녹색성장의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및 녹색 ICT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OECD 국가와 개도국의 적극적인 국제협력이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 선언문은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OECD 회원국들과 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뤄져야 하며, 경제회생과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OECD 모든 위원회가 참여해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Strategy, GGS)을 수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바탕 아래 2011년 5월 말 완성될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녹색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권고와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제공할 계획임에 비해, 2010년 5월 말 OECD 각료이사회에 보고된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는 정책담당자들이 녹색성장정책 추진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초기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먼저, 녹색성장정책은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에 내재된 특징인 외부성과 시장실패 문제로 인해 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부 개입은 민간기업들의 장기투자에 필요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녹색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계·기업의 수요증대를 유인하면서 연구개발, 청정에너지 활용, 경제전반에 걸친 혁신 및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정책툴킷(policy toolkit)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정책수단을 모두 포함한다. 첫째 범주는 가격 신호를 통해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시장에 기반한 정책수단들로 환경관련 조세와 부담금, 탄소배출권,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폐지 등이 해당된다. 다른 범주는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들로 직접적 규제, 녹색기술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 에너지효율 등급, 환경라벨링과 같은 정보제공 혹은 자발적 접근방법 등이다.

중간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도입된 경기 부양조치들이 경기회복뿐만 아니라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등 녹색 인프라 및 R&D 투자 등을 통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고연비 신차 구입(노후 자동차 대체)시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은 오히려 자동차 이용을 장려해 환경 문제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와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경기 부양조치들이 시의성을 갖고 목표지향적이며 한시적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또한 환경에 대한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적절한 가격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환경에 유해한 화석연료 보조금의 철폐 필요성과 함께 환경관련 조세, 부담금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명확한 가격신호를 통해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녹색경제로의 진전상황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의 결정 요인과 이들 요인 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발전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중요하다. 녹색성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①환경을 고려한 생산활동 평가 ②환경을 고려한 소비 평가 ③자연자원, 실물자산 및 환경의 다양성 ④환경을 고려한 생활의 질 ⑤정책 대응과 정책수단 등 5개 영역에 대한 지표가 각각 개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GGS 중간보고서는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10대 과제로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 녹색성장을 위한 장애 극복, 녹색상품·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녹색정책수단의 개발, 녹색성장으로의 이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대규모 '녹색 이노베이션' 지원, 개발을 위한 녹색성장, 핵심분야의 녹색화, 녹색성장의 지역적 측면 고려, 지표 개발



지난 10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박람회2010'에서 내방객들이 테트라팩 친환경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을 구경하고 있다.

진전 및 국제적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녹색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예정

OECD사무국은 지난 9월 초 2011년 5월 말 각료이사회에 보고될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의 개요 발표를 통해, GGS 종합보고서는 녹색경제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책담당자들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핵심 메시지와 정책권고를 담게 되며, 특정 주제·분야별 심도있는 분석은 각 위원회별로 추가로 진행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2011년 각료이사회 이후에 각국의 상황과 경제발전 단계에 적합한 녹색성장정책 프레임워크 연구 및 녹색성장을 측정할 지표(시점별, 국가별) 개발 계획을 명시함으로써 '녹색성장'은 종합보고서 작성 이후에도 OECD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종합보고서는 녹색성장 모델의 필요성, 녹색경제로의 이행 촉진, 개혁의 추진, 녹색성장의 이행상황 측정 및 녹색성장의 구현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먼저, 녹색성장 모델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기존 경제성장 모델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의 문제점(기후변화, 물 부족, 환경시스템의 다양성과 질 저하 등 환경 문제 이외에 높은 실업률, 재정

건축, 인구증가, 식량공급, 에너지 안보와 빈곤 등 거시경제적 과제 포함을 개도국과 선진국의 서로 상이한 여건을 감안해 분석하게 된다. 아울러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이 상호 보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함께 기존의 국민총생산(GDP) 지표가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삶의 질을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이 논의된다.

다음으로 녹색경제로의 이행 촉진 부분에서는 환경유해보조금 폐지, 실패한 규제, 무역·투자 장벽 등 녹색성장의 장애물 제거 필요성과 함께 환경 외부성에 대한 적정가격 설정, 녹색투자를 뒷받침할 금융조달방법, 민간기업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정책 등 시장실패를 보완할 정부의 역할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개혁의 추진 부분에서는 녹색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낙오자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법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글로벌 불균형 문제와 함께 고용시장과 역량강화 훈련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비용 최소화, 지역별 정책의 정합성 유지 및 효과적인 재원 배분 문제 등도 논의에 포함된다. 또한 녹색성장의 이행 상황 측정 부분에서는 중간보고서에서 논의됐던 지표들과 국제에너지기구와의 도움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이행 정도와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게 되며 측정 대상과 측정방법, 기존 지표들의 한계 및 대표적인 녹색성장 지표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끝으로, 녹색성장의 구현 부분에서는 개도국, 시민사회, 기업 등 녹색성장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와 녹색성장전략의 주요 요소들을 도출한다. 각국의 저탄소 발전전략과 경제정책 검토과정에서 밝혀진 정책권고도 논의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권고는 OECD 회원국뿐 아니라 파트너 국가들의 공동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선도국으로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충실히 이행해야

OECD가 녹색성장을 한국의 브랜드로 인정하는 상황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우리나라의 국격상승과 더불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해 OECD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

지 과제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첫째, OECD의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 작성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GGS 종합보고서 개요에 대한 우리나라 녹색성장 관계부처의 검토의견과 ‘Green Korea’ 등 우리가 주최한 녹색성장 국제회의의 결과물 전달 및 OECD의 녹색성장전략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논의하는 워크숍(10월 28일, 서울) 개최 등을 통해 OECD가 준비 중인 보고서의 내용 충실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겠다. 또한 OECD 사무국과 각국 대표부의 녹색성장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FOGG(Friends of Green Growth)의 장국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해 각국 대표부와 사무국 간 효율적인 협력채널 역할 수행을 통해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의 완성도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수립한 ‘녹색성장전략 5개년 계획’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 OECD가 우리나라를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평가하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우리의 녹색성장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의 선도국가에 걸맞은 행동이다.

끝으로, 녹색성장전략의 전세계 전파를 위해 OECD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OECD가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 개요에서 밝혔듯이 OECD의 녹색성장전략에는 회원국뿐 아니라 개도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또한 지난 6월 우리나라가 출범시킨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는 개도국의 녹색성장전략 수립 지원 및 녹색성장전략의 전세계 전파를 목표로 설립되었으므로 이 연구소의 사무국 구성이 완료되는 올해 말 이후에는 OECD 사무국과의 활발한 협력 논의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녹색성장전략 전파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내외경제]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주OECD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기준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andyashley@naver.com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상이몽 ‘DDA 개발협상’

2001년 출범한 DDA 협상을 그 이전 다자무역협상과 구분 짓는 가장 큰 환경변화는 전반적으로 개도국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발, 즉 개도국에 대한 특혜대우(Special and Different Treatment; S&D) 문제가 협상의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현행 다자무역협상을 ‘Doha Development Agenda’(DDA)라고 명명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개발’은 DDA 협상의 주요한 축으로써, 그 중요성과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지난 2008년 7월 29일 카말 나스 인도 상업장관이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도하개발어젠더(DDA)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불만을 표시했다.

사실 1947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설립 당시에는 개도국에 다른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GATT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회원국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GATT의 23개 원 계약국 중 11개 국가가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그들이 합의한 협정문에는 어떠한 특별대우의 개념도 없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개도국에 대한 S&D 개념도 1964년 GATT 협정문에 ‘무역과 개발(Part IV)’이 추가되면서 비상호원칙(non-reciprocal principle)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79년 소위 ‘Enabling’ 조항(필자 주;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게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개도국에 대해서만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으로써 GATT 1조(최혜국대우)의 대표적 예외임. 1971년 도쿄라운드 협상 결과로 채택됨.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GSP 및 비관세 조치, 개도국 간 지역 및 다자무역협정(GSTP), 최빈 개도국에 대한 특혜대우 등이 있음을 통해 보다 구체화됐다. 그 후 1991년 UR 협상의 결과로 만들어진 WTO 협정문에는 약 155개에 달하는 S&D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대부분의 S&D가 비구속적인 ‘best endeavor’(최대한 노력) 조항이라는 점에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DDA 협상을 출범시킨 2001년 도하각료 선언문에서 WTO 회원국들은 모든 S&D 조항을

강화하고 더 정확하고 실효적이며 운용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를 검토할 것을 합의하게 됐다.

2002년 무역협상위원회(TNC)는 S&D 검토 문제를 무역개발위원회 특별회의(CTD-SS)에서 논의하고 2002년 7월 31일까지 분명한 제안을 갖고 일반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아프리카 및 최빈개도국(LDC; Less Development Country)들은 협정문상의 S&D 조항을 강화하기 위해 88개에 달하는 협정별 제안서와 S&D 모니터링 시스템 제안서를 제출했고 선진국들은 S&D 관련 많은 시스템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반박했다.

CTD-SS에서의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한 가운데 2002년 7월 및 12월 일반이사회 보고를 통해 CTD-SS는 88개 협정별 제안 중 오직 4개에 대해서만 합의를 도출했음을 알리게 된다. 일반이사회는 보고 시한을 2003년 2월 10일로 재연장했으나 이것 또한 지켜지지 못하자 CTD-SS는 오히려 일반이사회가 도하각료 선언문의 합의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침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반이사회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일반이사회는 의장에게 이 문제를 회원국들과 협의하도록 했으며, 회원국들과의 협의 끝에 일반이사회 의장은 남은 84개 협정별 제안서를 3개의 카테고리(필자주: 카테고리 I은 회원국들 간 합의 가능성이 높은 제안(38개), 카테고리 II는 협상이 진행 중인 분야의 제안이면서 다른 협상그룹에 이관할 제안(38개), 카테고리 III은 회원국들 간 이견이 매우 큰 제안(12개)을 의미함)로 나누고 카테고리 II는 농업, NAMA 등 협상그룹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이관하고, 카테고리 I, III에 해당되는 제안 중 이미 합의되거나 협정종료로 불필요해진 제안들을 제외한 16개만을 CTD-SS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CTD-SS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개도국 우대협상의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라며 비판하기도 했으나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했다.

2008년 무역개발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은 16건의 제안 중 타결 가능성이 높은 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및 수입허가협정상의 의무면제와 관련된 6건에 대해 텍스트 초안을 작성하고, 우선 협상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개도국의 SPS 의무 예외요청에 대한 호의적 고려(SPS 10.3조), 신규 SPS 조치 도입 시 개도국 수출보호를 위한 유예기간 적용(SPS 10.2조), 수입허가 배분 시 개도국 상품 수입업자에 대한 특별배려(수입허가협정 3.5조) 등 6개의 텍스트 기반 협상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CTD-SS 차원에서 6개 제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2009년부터는 의장과 회원국들 간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만 논의가 이뤄졌으며, CTD-SS에서는 비공식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만이 간단히 이뤄졌다. 그러던 중 2010년 3월 TNC stock taking을 위한 CTD-SS 의장 보고에서 6개 제안에 대한 회원국들 간 의견대립이 소수의 범주로 좁혀졌고 적절한 시기에 종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포함되게 됐다. 이에 선진국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2010년 7월부터 CTD-SS에서 다시 협정별 제안서 논의가 시작됐다. 개도국들은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그동안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합의 마지막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비난했다. 그러나 이에 선진국들이 반발하면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 듯한 상황이다.

S&D 모니터링 시스템, 근본적 견해차 좁혀지지 않아

협정별 제안서 논의가 도하각료 선언문상의 합의(44조)에 따라 시작됐다는 데 대해서는 선진국, 개도국 간의 의견차가 없는 데 반해, S&D 모니터링 시스템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크다. 개도국들은 모니터링 시스템 논의도 도하각료 선언문 44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관련 논의가 도하각료 선언문이 아닌, 2007년 7월 일반이사회 회의록 251조(필자주: WT/GC/M/75(2002년 9월 27일)에 따르면 일반이사회는 CTD의장보고(TN/CTD/3)의 14~19조까지의 제안을 승인했는데 CTD의장보고의 17조가 일반이사회가 S&D 모니터링 시스템 수립에 합의하고 CTD-SS가 모니터링의 기능, 구조 등을 추가 논의하도록 지침을 주도록 제안하는 내용이었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위임 관련 논란은 모니터링 시스템 논의를 단순히 투명성 차원에서의 논의(transparent exercise)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해결방안 등도 논의돼야 하는가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 모니터링 시스템 내용에 대한 기본입장 차이와도 밀접

하게 관련돼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안을 통해 시작된 S&D 모니터링 시스템 논의는 2009년 11월 CTD-SS 의장 텍스트를 기초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의장의 'non-paper 3차 수정안' (2010년 4월 30일이 배포돼 있다. CTD-SS에서는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목적, 구조, 적용 대상, 기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모니터링의 목적에 대해, 투명성 차원에서 회원국들이 S&D 조항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쳐야 한다는 선진국들의 의견과, 이행결과 확인만으론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논의하고 이를 일반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개도국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모니터링 구조 관련 검토를 이슈 해당 기술적 기구에서 할 것인지, 모니터링 전담기구(CTD-DS)에서 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며, 모니터링 대상에 대해선 WTO 협정상의 S&D 조항으로 한정할 것인지, 일반이사회 및 각료회의 결정상의 S&D 조항도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다.

개도국 지위 결정을 당사국에 맡긴 것이 근본 원인

그동안 CTD-SS의 S&D 협상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텍스트에 기반한 협상이 이뤄졌고, 새로운 메커니즘 마련에 필요한 고려요소도 정리되는 등 협상의 프레임워크가 마련됐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전반적으로 DDA 협상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일부 분야에서는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지만, 개발은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 관련 논의가 부진한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S&D에 대해 선진국, 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너무나도 극명하기 때문이다. S&D의 목적이 개도국의 개발이냐, 아니면 개도국을 국제무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 논쟁의 출발점이다. 선진국들은 당연히 S&D가 개도국에 일반적인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도국들을 국제무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고안된 방안이며, 그에 따라 S&D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WTO 회원국의 2/3가 개도국 범주에 들어가



사진은 지난 2008년 7월 21일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열린 DDA 무역협상을 위한 주요국 각료회의 모습

는데 이 많은 개도국들에게 모두 동일한 대우를 제공할 수는 없으며 개도국 내에서도 그룹을 나눠 각기 다른 대우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기본입장이다.

이 모든 문제가 어찌면 WTO상의 개도국 지위가 자기 선언에 따라 결정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최빈 개도국에 대한 개념은 UN상의 정의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개도국의 정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인도 등이 과연 개도국이나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DDA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각 분야별로 소규모 대사급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개발 분야의 소규모 대사급 회의가 관련 협상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회의 결과를 보면, 선진국·개도국 대사들이 실무자들이 견지해 온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가장 성과가 미흡한 소규모 회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선진국, 개도국 양극단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논의의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파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주제네바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권혜진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hjinkwon07@mofat.go.kr

농지매입에 의한 생산조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때_ 10월 13일 오전 11시

곳_ KDI 회의실

진행자_ 사공용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참석자_ 민연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공용: 최근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3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426만톤 이상 생산되는 쌀은 전량 시장에서 격리하고, 전작보상제로 벼 이외의 타 작목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며, 2015년까지 논 3만ha를 매입해 타 작목 재배로 전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시장격리에 대해서 말해보자.

박동규: 정부가 사전적으로 시장격리를 발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쌀 생산량이 결정될 무렵이 돼서야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사후 발표였다. 정확한 정보가 결여돼 있으니 시장참여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고 모두가 불안해했다. 그 과정에서 유통불안, 시장경색 등 많은 부작용



사공용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8.31 대책에서는 생산과잉 물량은 사전에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 불안감을 최소화했다. 시장을 안정시켰다고 본다

사공용: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과잉공급 징조가 보이지만 하면 무조건 정부가 나서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는 단초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

박동규: 시장격리 물량을 정부가 얼마에 매입해서 비축하느냐가 문제다. 지금까지 정부가 매입해서 격리했던 물량들은 가공용 등 여러 용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방출했다. 실수요가 거의 없는 물량이라는 얘기가. 그런데도 시장격리 물량을 정상적인 쌀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매입했다. 결국 농민들에게 생산을 유도한 것이다. 시장에서 격리하는 물량은 시장가격과 차별화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공용: 시장가격과 차별화된 가격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박동규: 시장에서 격리하는 물량은 주정용이나 가공용 등

으로 80kg에 4~5만원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정상적인 쌀 가격은 15만원 정도인데 가공용 등으로 사용할 쌀을 이 가격에 사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낮은 가격에 사게 되면 농가에 부담이 된다. 타협적인 적절한 가격이 필요하다.

사공용: 농협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다. 농민들에게는 똑같은 쌀인데, 결국 이중가격이 설정되는 것 아닌가?

민연태: 이중가격은 아니다.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가능하다. 수확기에 농협이 쌀을 사들이면 궁극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쌀을 사게 된다. 이것을 그냥 시장에 맡기면 대폭락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공용: 올해 전작보상을 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할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2015년에 논 3만ha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민연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의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도록 지원해 연간 20만톤 이상의 쌀 생산량을 감축할 생각이다. 한시적으로 시작해 보고 추후 다시 확대나 감소를 결정하겠다. 다만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정부 매입은 3만ha로 계획하고 있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농지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과잉물량 해소의 수단으로 적정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내년은 일단 1천ha를 사들이려 한다.

박동규: 4만ha의 생산조정을 통해 생산량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인데, 물론 당장에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생산량이 감소하면 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는 기존 쌀 농가에 더 적극적으로 쌀을 생산하게 만드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 조정을 통한 생산량 감소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생산유발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생산조정 대상면적을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생산조정 방식보다는 생산을 유발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공용: 쌀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박동규: 대표적인 정책이 쌀 농사를 해야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다. 쌀농사를 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미



민연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사공용 교수

“
**작황이 좋아서
 426만톤보다 많을
 수도 있고, 재배면적이
 많아서 과잉 생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원인이
 다름에도 정부정책은
 구조적 문제를 따지지
 않고 그때그때 생산된
 물량관리에만 급급했다.**
 ”

매입 방식도 문제다. 시기에 사서 시기에 방출해야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없는데, 지금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있다. 이것도 생산을 유발하는 정책 중 하나다. 농가 입장에서는 공공비축미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먼저 생산을 초래하는 정책들을 생산중립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사공용: 쌀 생산 과잉은 단기적인 작황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재배면적이 많아서 나타날 수도 있다. 단기적인 작황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공공비축제도의 역할이고, 구조적으로 재배면적이 많거나 적은 것은 다른 조정이 필요하다. 방금 박 박사께서 말씀하신 변동직불금은 구조적 문제에 관련한 것이다.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줄이기 위해 생산을 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말하셨다. 그런데 얼마 전 조사한 것에 따르면 농민들이 직불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고정직불금은 생산에 연계되지 않아야 하는데 반대로 알고 있다. 정부의 홍보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산과 연계되지 않아 공급과잉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박동규: 고정직불금은 논의 형상만 유지하면 벼 재배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꼭 벼를 재배해야 수급 자격이 부여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헛갈려 한다. 5년이 지난 지금도 혼란스러워 하는 농민이 많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쌀 직불제를 생산중립적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다.

민연태: 일리가 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농가 입장에서는 수급보다 소득적 측면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제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도의 장점은 알고 있지만 현실과 느끼는 부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 같다.

사공용: 공공비축제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자.

박동규: 단기적인 공급과잉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비축제도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공공비축제는 그야말로 식량안보를 위해 정부가 일정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시가로 매입해서 시가로 판매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WTO에서 허용하는 정책이다. 생산과잉

이라 해서 더 매입하면 원래의 공공비축이 아니므로 WTO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공비축제는 원칙대로 가야 한다.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공용: 그래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작황지수다. 작황지수는 과거 5개년 간 10a당(10a는 0.1ha로 1,000㎡) 생산량인 단수(단위 면적당 생산량에서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나머지 3개년의 평균 단수를 나타내는데, 이런 작황지수의 일정 수준에 따라 시장격리를 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시장격리에 대한 원칙이 없으면 임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원칙이나 기준이 있으면 투명한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민연태: 8.31대책을 발표한 것은 기준을 정해서 시장에

“
**8.31 대책은 격리기준이나
 시기를 명확히 설정해
 생산조정을 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밝힌 것이다.
 현재의 제도를 중에 생산
 중립적이지 못한 제도는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충분히 고민하겠다.**
 ”



민연태 과장

먼저 시그널을 준 것이다.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작황지수 같은 것도 합리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만들며 검토하고 있다. 적정 면적을 얼마로 정하느냐가 어렵다. 잘 아시겠지만 쌀 농업은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단기적인 작황인지, 구조적인 과잉 문제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작황지수도 예측 가능성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장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박동규: 문제는 쌀을 어떤 방식으로 매입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은 일정 물량을 벗어나게 되면 정부가 격리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 생산량이 수요량 이상으로 넘어가도 정부가 시장가격으로 사주기 때문에 농가는 열심히 생산량만 늘리면 된다. 질 대신 양을 택한다는 얘기다. 호프벼(농촌진흥청 호남작물시험장에서 육성한 품종)의 경우를 살펴보면 더 명확하다. 밥맛도 좋고, 생산량도 많아서 재배면적 비중이 2008년 1.1%, 2009년 8.9%, 2010년 17.2%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정상적인 여건 아래에서 수확을 하면 10a당 보통 600kg 정도 생산되는데 비료를 추가적으로 투입한다면 800kg 이상이 생산된다. 결국 농가에게 많이 생산하라고 독려해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어떤 방식으로 격리하느냐가 문제다.

민연태: 지금 상황에서는 작황지수를 정해도 생산을 많이 하면 정부가 모두 해결해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현행 제도도 마찬가지다. 목표가격 자체가 생산량이 많아지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수확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진다. 그러나 비록 가격이 일부 떨어져도 소득은 불변이거나 더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쌀 직불제 목표가격(정부가 정한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고정형과 변동형 보조금 형태로 매워 주는 제도로 현재 쌀 80kg 한 가마당 17만83원입)를 목표소득(가격×단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단수가 늘면 농가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다.

사공용: 올해의 경우 426만톤 이상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작황이 좋아서 426만톤보다 많을 수도 있고, 재배면적이 많아서 과잉 생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원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구조적인 문제를 파지 않았다. 그때그때 생산된 물량의 관리에만 급급했다. 현재의 공급과잉은 과잉 재배

면적에도 기인하는 것이다. 박 박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변동직불금제도를 생산과 비연계하게 만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나?

민연태: 이번 대책은 물론 단기대책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느 정도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기존의 대책과는 다르다. 8.31 대책은 격리기준이나 시기를 명확하게 설정해 생산조정을 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밝힌 것이다. 물론 현재의 제도들 중에 생산 중립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을 조장하는 제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은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충분히 고민하겠다.

박동규: 단기적인 대책이 먼저 들어가면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데,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한쪽에서는

“
생산을 유발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표적인 생산유발 정책이 쌀 농사를 해야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다. 쌀 농사를 안해도 직불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
 ”



박동규 선임연구위원

열심히 생산하라고 장려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또 생산하지 말라고 하는 격이다.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민연태: 제도를 만드는 순간 그러한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쌀 직불제가 있는 한 생산을 우선시해야 한다. 고정 직불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단수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가격만 고려할 경우 목표 가격 인상이라는 정치적 압력이 증대할 수밖에 없어 결국 변동직불금의 수요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박동규: 쌀 직불제, 목표가격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쌀 직불제가 홍보가 잘 되면 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농가조사를 해보면 작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바로 가격이다. 쌀 가격이 좋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좋거나, 이것이 쌀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직불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과잉이 초래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공용: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먼저 풍년과 같은 단기적 공급과잉이 발생했을 경우의 시장격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 거 같다. 그러나 구조적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불제를 생산 비연계로 전환해 공급과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는 직불제가 작동하면 생산과 어느 정도 연계될 수밖에 없으니 보완하는 정책으로 생산조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번에는 농지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정부가 2015년까지 3만ha를 매입해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전 상황을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닌가.

민연태: 농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다만 충격을 완화할 범퍼가 필요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예를 들면 벼를 심었다가 작황을 보고 생산과잉이라 판단되면 사료로 쓰면 된다. 물론 매입비용 등을 따져봐야 전체적인 비용이 나오겠지만 그 비용이 훨씬 저렴할 수 있다.

사공용: 작황에 따라 생산이 과잉돼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재배면적이 많아 시

장에서 격리하거나 사료로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산비도 못 건지는 가격에 처분한다는 것으로 비효율적이다.

민연태: 생산비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의 가격은 받고 판다. 물론 쌀값보다는 안 나오지만 일정 가격은 받을 수 있다. 사료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대체 효과도 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땅을 개인에게 맡기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정부가 일정 부분은 국유화해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박동규: 지금 당장은 수급을 안정시키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될 것이다. 가격이 잘 조절돼 생산량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쌀 소비는 갈수록 줄어들므로 수급안정을 위한 농지매입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산조정제의 차이점도 명확하지 않다.

사공용: 생산조정제, 농지매입은 정말로 정부가 조심해서 해야 할 정책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3만ha라면 괜찮겠지만, 자칫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일본은 지금 전체 논의 40% 이상이 생산조정제 대상이다.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할 수 없다. 특히 생산조정제와는 달리 농지매입은 이런 연구나 논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민연태: 심시숙고하겠다. 규모나 예산을 협의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겠다. 나라경제

Masterpieces of
Goryeo
Buddhist Painting

용산 개관 5주년 기념

고려불화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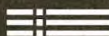
高麗佛畫大展

700년 만의 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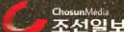

2010
10. 12 tue -
11. 21 sun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주최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협찬 아시아나항공

후원  ChosunMedia
조선일보  KBS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 대중의 ‘심리코드’

노 무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코드’라는 게 이슈가 됐다. 코드가 달라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다른 코드에 맞추다 보니 밥솥을 태워먹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일부에서는 서로 평가하기 하는 것을 비난하는 용도로, 일부에서는 평가하기를 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다. 코드 또는 일명 ‘심리코드’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가진 서로 다른 마음을 잘 나타내는 용어다. 당시에는 마치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구분처럼 통용되다가 어느 틈에 조용히 사라졌다.

코드는 말은 정치적 의미가 아닌 대중심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대중의 마음을 잡고 이들을 움직이는 주요 사회 이슈들은 나름 대중의 심리코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치파동’으로 나타난 배추파동은 일상생활의 불안정성, 불안을 회피하고 싶은 대중의 심리코드를 잘 반영한다. ‘주택’, ‘복지’, ‘저출산·고령화’, ‘사교육 열풍’ 등의 사회문제들은 모두 대중이 가진 다양한 심리적 코드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각의 이슈에 대해 대중이 어떤 심리코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정부정책은 탁상공론이거나 정책의 수용자와는 거리감이 있는 공무원이나 연구원 그들만의 생각이기 쉽다.

심리코드를 통한 정책의 이해, 해결책의 탐색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낯선 사회문제, 해결하기 힘든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때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선진국 사례를 찾았다. “선진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결과를 무작정 도입하거나 참고하려 했다. 타인의 경험과 시선을 통해 우리의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방식들은 더 이상 우리가 직면한 문제나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시작했다.

‘된장녀’, ‘성형중독’, ‘신상녀’, ‘88만원 세대’, ‘꽃남’이나 ‘짐승남’, ‘건어물녀’ 등의 단어들을 접해 본 적이 있는가? 모두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중문화 현상들이다. 아니, 새로운 인간 종족들의 행동 방식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또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반영하고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이 가진 심리코드를 알 때 나온다. 외국의 사례나 이론을 무작정 적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사회현상이나 이슈에 대해 대중이 가진 심리코드를 탐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혼란스럽다. 대중이 가진 심리코드는 이슈마다 다르고, 특정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 움직이며 ‘그때그때마다 달라요’라는 마음을 잘 나타낸다. ‘넌 왜 여기에서는 이 코드를 썼다가 저기에서는 저 코드를 쓰니?’라고 항의할 수도 없다. 사람의 마음에 달린 문제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새로운 정책이 쏟아지지만, 항상 언젠가 들은 듯한 느낌이 들고 또 별로 새롭지 않은 정책이 되고 마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 그때그때 다르게 가진 심리코드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대중이 겪는 문제는 정답을 찾고, 공자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특정 이슈나 문제에 대해 대중이 공감하는 심리코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배추파동에서 ‘중국배추 수입’이나 ‘김장을 늦추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공무원의 마음이 이해는 되면서도, 정말 대중이 가진 심리코드에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심리**

사회문제들은 모두 대중이 가진 다양한 심리적 코드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각의 이슈에 대해 대중이 어떤 심리코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정부정책은 탁상공론이거나 그들만의 생각이기 쉽다.



황상민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심리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국내 소비자 심리학 분야의 권위자다. 저서로는 「디지털 과짜: 미래 소비를 결정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대통령」, 「대한민국 사이버 심인류」, 「너 지금 컴퓨터로 뭐하니」 등이 있다.
swhang@yonsei.ac.kr

- 52 2013~2014년까지 균형재정 목표 달성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 54 2040년, 세계 5위 과학기술 선도국 만든다
'2040년 과학기술 미래비전' 수립
교육과학기술부
- 56 한국 농업의 성공 노하우 개도국에 알린다
'제30차 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부



2013~2014년까지 균형재정 목표 달성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정부는 2004년부터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1회계연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년도 예산안 편성으로 국가적 차원의 정책방향과 중장기 재정전망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전망하에서 국가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총량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에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수입과 지출 등 재정총량에 대한 전망치만 제시했으나, 올해부터 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세분해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재정수지도 전망과 함께 그 근거 및 관리계획을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관리계획, 전년도 계획 대비 평가·분석 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중기 재정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증가율
2009~2013년 계획	287.8	309.5	337.6	361.7		7.9
2010~2014년 전망	290.8*	314.6	342.9	365.1	390.9	7.7

주: *국회 확정예산 기준

〈표 2〉 조세부담률 전망

(단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9.3	19.3	19.5	19.6	19.8

주: *2010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2014년 조세부담률 19.8%로 관리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호조로 전반적인 경기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성장률 전망이 당초 5%에서 5.8%로 상승하고 2011년 이후에는 5% 내외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과 투자부진 및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에 힘입어 2010~2014년 기간 중 재정 수입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당시 전망보다 많게는 5~6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

세부담률(국제 수입과 지방세 수입 등 조세 수입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9~2013년 계획 당시 전망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데 기인한다. 다만 비과세·감면 축소, 신규세원 발굴 등 지속적인 세입확충 노력을 통해 조세부담률은 매년 완만하게 상승해 2014년 19.8%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수입 증가와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소요가 늘어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지출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9~2013년 계획에서 제시

한 수준(4.2%)보다 다소 높은 4.8%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창조적 R&D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관광·환경산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등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를 적극 지원

36.1%까지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에는 30%대 초반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2009~2013년 계획에서 전망한 수준보다 2%p 내외 개선된 수준이다.

2013~2014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30%대 초반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는 주요

향후 예상되는 재정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통계 산출기준도 최신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개편해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정부는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조기에 위기를 극복했다. 경기 회복으로 재정적자는 2009년 GDP의 4.1%에서 2010년 2.7%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상황에 대해 IMF·OECD 등 국제기구의 긍정적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이다.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재정여력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2010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도 경제성장과의 조화를 고려한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했듯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도 차질 없이 지원해야 한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우리 실정에 맞는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전략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매년 2~3%p 낮게 유지하고 정부 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를 준수토록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의무지출을 신설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지출을 삭감하거나 별도의 자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 및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고용친화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맞벌이 보육, 장애인 의료, 무주택자 주거, 저소득층 교육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30%대 초반으로 개선

재정수입 증가에 따라 재정적자는 매년 전년 대비 5~10조원 내외 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011년 흑자로 전환되고, 우리가 보통 재정수지라고 부르는 관리대상수지(정부 재정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정부의 재정활동과 관계없이 흑자가 발생하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는 2013년에 GDP 대비 -0.4%로 개선돼 2014년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2010년에 GDP 대비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적극적인 수준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이에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매년 2~3%p 낮게 유지하고 정부 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의무지출을 신설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지출을 삭감하거나 별도의 자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다. 대규모 재정지출(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 2천억원 이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지출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30~50년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장영규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서기관
ukjang@most.go.kr

2040년, 세계 5위 과학기술 선도국 만든다

‘2040년 과학기술 미래비전’ 수립

2040년 미래에는 영화 속 ‘아바타’가 실현될까?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슈퍼파워 ‘아이언 맨’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꿈꾸는 한국의 미래 사회 모습을 전망하고 이를 과학기술로 실현하기 위한 ‘2040년 과학기술 미래비전’에 대해 살펴보자.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미래비전 기획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특별보좌관)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미래비전 시안을 마련했다. 또한 워크숍, 설명회, 보고회 등을 통해 각계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반영해 지난 10월 1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2015년, 온도적 가능한 나노소재 옷 개발

과학기술을 둘러싼 인구 불균형, 기후변화, 신흥강국 등장, 지속가능한 발전의 위협요인 증가,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 등 주요 선진국의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한국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5대 한국의 환경변화(환경과 자원문제 심화, 지식기반사회 진전과 글로벌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과학기술 융

2040년 과학기술 미래비전은 ‘삶의 가치를 높이며 꿈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세계 5위의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 실현’으로 설정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모습은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풍요로운 세상’, ‘건강한 세상’, ‘편리한 세상’으로 구분해 과학기술 측면에서 전망했다.

〈그림〉 바이오기술로 젊어지는 초고령 사회



합 가속화, 사이버공간 안전성 등 새로운 안보이슈 등장을 제시했다. 이런 한국의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모습을 전망하고, 2040년을 지향하는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과 목표를 설정했다.

2040년 과학기술 미래비전은 ‘삶의 가치를 높이며 꿈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세계 5위의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 실현’으로 설정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모습은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풍요로운 세상’, ‘건강한 세상’, ‘편리한 세상’으로 구분해 과학기술 측면에서 전망했다.

우선,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은 친자연적인 생활환경이 구현된 세상이다. 2023년에는 발전 효율이 향

상되고 높은 안전성을 지닌 차세대 원자료가 개발돼 국내 전기 생산의 60%를 담당할 전망이다. 환경오염 방지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공장·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포집하는 기술은 2027년 등장할 것이다.

둘째, 초전도, 수직농장, 접이식 디스플레이 기술이 상용화되고,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이 가능해진다. 로봇을 이용한 풍부한 노동력과 다양한 첨단기능소재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것이다. 2015년에는 항공, 온도적응 등 기능을 갖춘 나노소재 옷이 개발되고, 2016년에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이 검증돼 맞춤형 식품을 대량으로 생산한다. 군사·의료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다.

셋째, 인공혈액, 인공망막, 뇌질환 원인 규명, 맞춤형 백신 등 바이오기술 발전으로 난치병치료 및 장기재생기술이 보편화되고 신종질병 및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사회가 된다. 건강한 세상은 첨단 의료서비스가 보편화되고 난치병 치료가 가능한 세상이다. 이를테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장기재생기술이 상용화되며, 2028년에는 의료용 나노로봇이 등장해 혈관을 청소하고 특정 암세포를 공격해 치료할 수 있다. 빠르고 정확한 유전체 검사기술로 신속한 맞춤형 치료도 가능해진다.

나노·바이오 등 25개 미래핵심기술 적극 개발

끝으로, 착용형 로봇, 가상학습 시스템, 한국어 번역기 등 다양한 서비스로봇의 상용화, 가상현실 체험형

〈표〉 25개 미래핵심기술

	중·단기(10년간 집중투자로 기술경쟁력 선점)	장기(지속 투자로 미래 대비)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 신재생에너지 기술 · 고효율 에너지 기술 · 폐자원 재활용 및 광물 자원 기술	· 신재생에너지 기술 · 기후변화 감시· 대응 기술 · 오염원 발생 방지· 관리 및 생태 위해성 평가 기술 · 온실가스 저감 기술
풍요로운 세상	· 첨단기능소재 기술 · 신기술 융합 제조· 생산 기술 ·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 제조업 생산로봇 기술 · 첨단 농업생명공학 기술	· 첨단기능소재 기술 · 친환경 첨단 물류 기술
건강한 세상	· 신종 전염병 대응 기술 · 유해성 물질 관리 기술 · 안전한 생활환경구축 기술	· 신개념 의약 기술 · 노연구 및 뇌질환 치료 기술 · 실버산업 및 U-health 기술 · 미래전 대비 군사 기술
편리한 세상	·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 기술 · 가상현실 기술 · 새로운 운송 기술	· 지능형 서비스 로봇 기술 ·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개발 기술

서비스 제공 및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으로 편리한 생활기반이 제공된다. 유비쿼터스와 로봇이 생활 곳곳에 자리 잡아 일상생활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세상이다. 2020년에는 신체에 착용하는 로봇이 보편화되면서 노약자도 젊은 사람 이상의 신체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2035년에는 사이버 공간의 아바타가 사용자를 대신해 쇼핑이나 은행업무 등 간단한 일상업무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며 수행하는 기술이 등장한다.

정부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나노·바이오 분야 등 25개 미래핵심기술을 도출했다. 우선 기존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에서 제시한 90개의 중점과학기술과 녹색기술종합대책의 중점기술, 신성장 동력 기술 분야를 분석해 후보군을 만들었다. 이어 우리 과학기술의 SWOT(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의 머리글자를 모아 만든 단어로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도구) 분석을 한 뒤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의 실현시기를 고려해 중·단기와 장기로 구분했다. 이어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전문가 패널을 통한 합의방식으로 핵심기술 안을 도출했다.

정부는 (가칭)미래핵심기술 수준분석을 통한 액션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비전 확산과 공유를 위해 '미래비전 국제포럼'(2010년 10월2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미래의 한국사회를 테마로 한 시나리오 공모전'(2010년 11월)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래경제



박지영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park0153@mest.go.kr

한국 농업의 성공 노하우 개도국에 알린다

‘제30차 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개최

우리나라는 44년 전인 1966년 9월에 제8차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아·태 지역총회를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개최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아시아 지역의 빈곤 및 기아의 심각성과 함께, 기아해방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기술보급에 의한 영농방식 개량과 식생활 개선, 적극적인 개간 등을 요지로 축사를 했다. 당시 비네이 란진 센(Binay Ranjan Sen) FAO 사무총장은 식량부족 국가들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선 직접적인 식량 원조보다는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때 우리는 외국의 원조가 절실한 수혜국 입장으로 식량증산을 위해 FAO로부터 약 700만달러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800만달러 수준의 프로젝트를 신청한 상태였다.

44년 만에 FAO 아태총회 경주서 개최

올해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 제30차 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는 우리의 44년간 변화된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우리의 발전모

과거 식량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받은 원조에 보답하고,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FAO 및 회원국들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업 분야 해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에는 현행 예산의 100% 확대를 골자로 한 사업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상태이다.

델과 식량증산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고, 국제 기아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요지의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전달했다. FAO 사무총장인 자크 디우프는 우리나라의 성공모델이 아태지역 회원국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용한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참여회원국들도 자국의 식량부족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농업협력 강화 등을 희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FAO에 약 130억원(2010년 기준)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 이는 191개 회원국 중 11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개도국에 지원을 해주는 공여국의 위치이다.

FAO는 최초의 UN 상설전문기구로 1945년 정식으로 발족한 국제기구다. 인류의 영양상태와 생활여건 개선, 식량의 증산 및 분배능률 증진을 목표로 설립됐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 영양상태 개선, 농촌지역

빈곤해소 등을 위해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금(AARDO)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WHO와 연계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을 1963년 설립하고 식품 안전성, 농축산물 생산규격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1960년 기아로부터의 해방 캠페인, 1996년, 2002년, 2009년 세계식량정상회의 개최 등 인류기아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10억이 넘는 세계 기아인구수를 줄이기 위해 WFP 등과 연계해 식량부족국가에 식량 및 농업생산기술을 제공하는 등 국가 간 연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FAO 효율화를 위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전례에 없었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지역총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 최국의 역할이 강화됐다. 향후 2년 동안 지역 내 회원국의 의견을 정리 해 의장국으로서 FAO 이사회와 총회 에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또한 이번 부터 특별회의(Side Event)를 병행해 개최했다.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와 책임있는 농 업투자'에 관해 다양한 발표와 토의 가 있었다. 특별회의에는 각국 대표 단 외에 국제기구, 지역기구, 비정부 기관, NGO 대표 등 다양한 주체들 이 참여했다.

특히 국제 농업투자가 증가되면서 투자 대상국 현지 소규모 농가 피해, 자원남용 우려 등이 증대함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원칙을 논의했다. 농업투자가 투자국과 투자 대상국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위한 원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위해 공동 대처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식량안보 제고와 기후변화 대응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09년 기준 전세계 기아인구의 64%인 6억4천 만명이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들 나라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지역총회에서는 FAO의 예산과 지원프로그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보다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데 회원국 간 의견이 모아졌



지난 9월 27일부터 5일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제30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총회'가 열렸다. 사진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고, 이는 내년 FAO 총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세계 인구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1.3%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식량생산은 1.1% 수준에 그치고 있어, 향후 식량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FAO와 회원국은 식량증산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우리나라는 주곡인 쌀의 자급을 달성시킨 선진 농업기술 등을 회원국과 공유할 의사를 개진했다.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농지사용, 투입재, 물관리 분야 등에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세계 배출량의 약 1/3을 차지하는 농업 분야의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회원국들은 동의했다. 이를 위해 향후 FAO와 회원국은 협력을 강화해 기후변화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과거 식량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받은 원조에 보답하고,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FAO 및 회원국들

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업 분야 해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에는 현행 예산의 100% 확대를 골자로 한 사업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상태이다. 또한 현행 10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베크, 케냐, 브라질, 파라과이, DR콩고, 알제리)에 설치한 해외기술협력센터(KOPIA: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를 향후 2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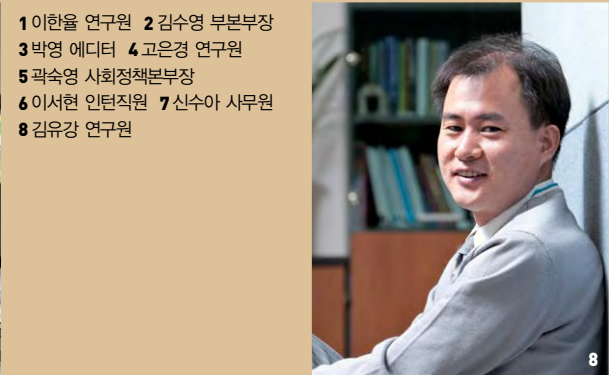
전세계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지속성장이 가능한 녹색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길이다. 식량부족으로 고통받는 개도국들이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자국의 특수성에 맞는 발전모델을 찾아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여 풍요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나의 정책



김종철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
jckim67@gmail.com

OECD와 아시아의 가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용 통계와 자료를 수없이 접하지만,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라는 이름은 아직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의 연원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OECD본부는 아시아 지역에 OECD 정책성과를 전파하기 위해 한국 재정경제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세센터'를 설립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가 각각 OECD와 MOU를 체결해 '경쟁센터', '정부혁신센터', '사회정책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효율적 관리와 기능제고를 위해 4개 센터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내의 4개 본부로 재편됐다.



1 이한울 연구원 2 김수영 부분부장
3 박영 에디터 4 고은경 연구원
5 광숙영 사회정책본부장
6 이서현 인턴직원 7 신수아 사무원
8 김유강 연구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 바쁘게 뛰고 있는 그들의 어깨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바쁘다>에서 그들이 일하는 현장을 구경해 보실까요?



사회정책본부는 지난 10월 4일부터 22일 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세미나실에서 아시아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는 OECD와 협력해 OECD국가들의 보건·사회정책과 선진시스템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전파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사회보장·보건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다지고 있다.

▲보건의료비 자료의 산출방법 전파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은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의 고민이다. OECD는 국가별 의료비지출 자료를 만들어 국가 간 비교를 실시한다. 국가 간 비교가 의미 있으려면 국가별로 자료산출의 방법이 같아야 할 것이다. 사회정책본부는 2005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가 회의를 통해 OECD가 마련한 보건계정인 'System of Health Account'를 보급해 비교 가능한 의료비자료를 산출해내고 있다.

▲사회보장비용 비교분석 방법 전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커진다. OECD 국가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당면과제를 갖게 됐다. 연금이나 사회보장 지출에 대해서도 국가 간 비교지표가 일치해야 하고, 비교방법이 같아야 의미가 있음은 물론이다. 사회정책본부는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OECD의 연금 등 사회정책 추세와 정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달한다.

한편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논의가 각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OECD에서도 불평등 문제에 대한 국가별 비교를 시도했는데, 그 결과로 올해 *Growing Unequal*을 발간했으며 한국어 번역본도 출간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야별 보고서 축적

보건, 사회분야별 전문가 회의는 OECD 정책전파에 그치지 않는다. 매년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부터 수집한 통계가 보고되므로, 이를 정리하면 분야별 국가별 보고서가 된다. 이것은 한국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교류할 때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축적된 성과는 「한눈에 보는 사회-아시아·태평양판」, 「한눈에 보는 연금-아시아·태평양판」, 「그린페이퍼(각 국가별 보건통계분석리포트)」 시리즈 등으로 출간됐으며, 최근 마무리작업이 진행 중인 「한눈에 보는 보건-아시아·태평양판」이 올해 말 출간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사회정책본부는 아시아 지역 공무원, 전문가에게 OECD 이슈와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을 제공해 해당 분야 통계산출 방법 및 정책수립 역량을 지원한다. OECD 정책과 교육을 통해 한국과 맺은 인연은 한국의 경제발전뿐 아니라 사회보장과 보건의료를 배우겠다는 의욕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국립암센터 등을 학



습대상으로 삼기를 원했다. 사회정책본부는 이들이 한국의 사회보장과 의료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國格'에 도움

사회정책본부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사회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곽숙영 부이사관과 부분부장을 맡고 있는 김수영 서기관은 보건복지부 출신의 공직자다. 곽숙영 부분부장은 지난 10월 OECD 보건장관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OECD 이념과 한국 사회정책의 접점을 고민하고 있다. 김수영 부분부장은 각 분야 연구원들과 함께 대외협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제회의나 행사에 참석한 외국의 전문가, 공무원들과 주말을 함께 보내기도 한다.

사회정책, 연금, 보건 분야별 연구원들도 관련 기관에서 파견돼 근무 중이다. 사회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고은경 연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으로,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사회 분야 국제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회 분야 국가별 리포트인 *Social Protection Technical Paper* 한국편을 준비하고 있다. 연금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유강 연구원은 국민연금공단 소속으로, 역시 11월에

열리는 연금 분야 국제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후에는 「한눈에 보는 연금」 개정보완작업을 진행한다. 보건 분야 담당자인 이한울 연구원은 건강보험공단 출신으로 보건계정 전문가 회의와 보건통계담당 공무원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추석연휴 3일도 필리핀 국제회의에 참석해 보건계정 개정작업의 추세를 파악해야만 했다.

신수아 사무원은 KDI 소속으로 2005년 출범 때부터 함께한 사회정책본부의 신증인이자 도서관이다. 편집의 달인이어서 모든 출판물이 그의 손을 거치면 최고가 된다. 박영 에디터는 사회정책본부의 영문에디팅을 담당하고 있는데, 수년의 경험과 국제감각으로 센터 주최 회의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인턴직원인 이서현 씨는 보건통계 담당공무원 연수와 사회 및 연금 분야 국제세미나 진행을 돕는다.

사회정책본부 구성원 모두는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일한다. OECD 본부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협의하고, 다양한 톤과 색깔을 가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한다. 소속이 각자 다르고, 이러한 노고를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OECD 대한민국의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는, 그래서 강팀이다. 나라경제

글 김수영 부분부장

내연금 갖기 캠페인

서로가 맺은 약속이기에 꼭 받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에 많이 받고
물가가 오른 만큼 더 받는
평생 월급 국민연금

● 가입기간 10년으로 연금 받기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120개월을 채우면 그 때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 가입기간 20년 이상으로 노후걱정 덜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지금은 다소 어렵더라도 젊을 때부터 시작하여 가입기간을 20년 이상 늘려야 노후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함께 가입하여 노후 든든

부부가 함께 가입해서 각자의 연금을 받는다면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도 수행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2011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교통안전 교육·홍보·연구·방송 및 기술개발에 운전면허시험 업무까지
도로 위 교통안전의 퍼즐을 완성하게 될 도로교통공단!
당신이 주인공인 안전하고 즐거운 도로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사업

교통과학연구

교통안전홍보

TBN 한국교통방송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



교통정보 안내전화
길눈이 쏠 1588-5779



저출산 고령사회, 이렇게 넘는다

저출산·고령화 추이가 심상치 않다. 2008년 1.19였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15까지 곤두박질치다 올해 1.24로 소폭 상승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평균 2.5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떨어지는 출산율 못지않게 빨라지는 고령화도 문제다. 2000년 이미 65세 인구가 7.2%에 달해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 고령사회(14%)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고령화 국가'란 오명을 벗기 위해 지난 9월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마련했다. 맞벌이 부부와 은퇴를 맞은 베이비붐 세대가 초점이 된 이번 대책의 구체적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나라경제』가 살펴본다.

대한민국 인구 2019년부터 줄어든다

‘골드미스’에 이어 ‘골드보이’가 등장했다. 능력과 재력을 갖춘 30대 중·후반의 싱글남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밖에도 초식남(남성다움을 강하게 어필하지 않고, 주로 자신의 취미활동에 적극적이나 이성과의 연애에는 소극적인, 동성애자와는 차별된 남성), 철벽녀(연애는 하고 싶지만 연애에 대한 환상이 크고, 자존심이 높아 자신의 이상형에 미치지 못하는 남자들이 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벽수비로 방어를 하는 여자)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 추세가 확산되면서 젊은 세대의 독특한 성향을 묘사한 신조어가 쏟아지고 있다.

미혼여성 49.2%만이 결혼에 긍정적

1970년 9.7%에 불과했던 20대 후반 여성의 미혼율이 35년 만인 2005년 60%에 육박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80년대까지 10% 후반을 유지하다가 1995년 29.6%, 2000년 40.1%, 2005년 59.1%로 급격히 높아졌다. 20~24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 57.2%에서 2005년엔 93.7%로 상승했다. 1970년 1.4%에 그쳤던 30~34세 여성의 미혼율은 2005년 19.0%를 기록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편혼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미혼남녀의 결혼관은 상당히 약화됐다. 미혼남성 중 71.4%가 결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태도는 29.4%에 불과하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49.2%만이 결혼에 긍정적이며,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태도는 12.9%로 남성에 비해 낮다. 〈그림 2〉를 보면 미혼남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도 반드시 가져야 하는 당위성에서 벗어나 선택적 가치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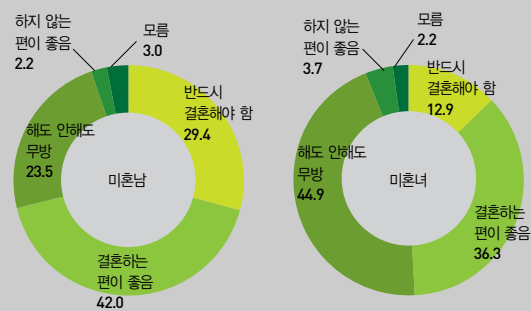
2009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수는 44만5천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 가입 여성의 출생아수 감소폭이 컸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도 1.15명으로 2008년(1.19)보다 감소했다. 이는 일본 1.27, 캐나다 1.53, 미국 2.05, 프랑스 1.89 등 OECD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유독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로 흔히 지적되는 것이 보육비 부담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09년 전국 보육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월평균 교육·보육비용이 2004년(26만7천원)보다 24%가량 증가한 33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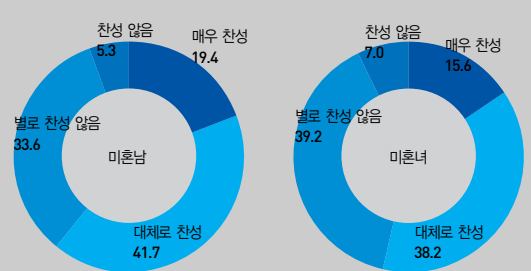
고령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문제와 건강

떨어지는 출산율 못지않게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고령화도 2010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상 중 하나다.

〈그림 1〉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그림 2〉 미혼남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2005)

〈표 1〉 2008, 2009년 연령별 출생아수

(단위: 천명)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8년	2.8	28.2	168.9	198.7	59.6	6.5	0.4
2009년	2.8	24.9	155.9	192.1	60.7	7.3	0.4
2009~2008	0.0	-3.3	-13.0	-6.6	1.1	0.8	0.0

자료: 통계청

〈표 2〉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65세 이상)

(단위: %)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거리 없음	건강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사회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일상생활도움 서비스부족	노인복지시설 부족	기타
2007년	38.4	2.4	5.3	43.6	3.7	0.2	1.7	0.7	3.0	0.9
2009년	41.4	2.0	5.7	40.3	4.4	0.2	1.7	0.9	2.5	1.0
도시	42.4	2.7	6.7	36.9	4.7	0.2	2.0	0.7	2.7	0.9
농어촌	39.3	0.6	3.5	47.3	3.8	0.2	1.0	1.2	2.0	1.1
65~69세	43.8	3.8	6.9	34.9	3.1	0.2	2.6	0.9	3.0	0.8
70~79세	40.6	1.3	5.2	42.5	4.5	0.2	1.4	0.8	2.2	1.2
80세 이상	37.6	0.1	4.1	46.8	7.4	-	0.1	1.2	2.0	0.8
(독거노인)	43.6	1.1	3.7	37.9	9.5	0.1	0.7	1.3	1.2	1.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지난 9월 30일 현재 총인구는 5천만명을 돌파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1%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80년 3.8%, 1990년 5.1%, 2000년 7.2%로 지속적 증가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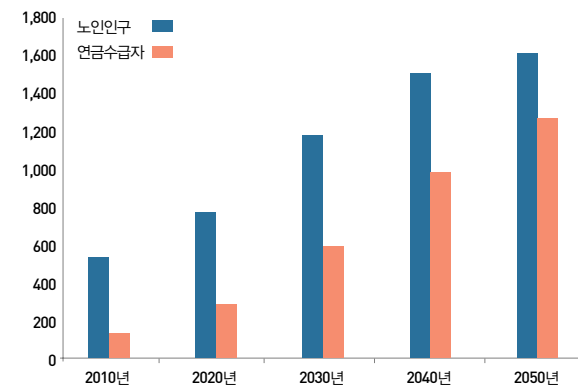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회)에 들어섰다. 통계청은 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돼 '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고령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반면, 농어촌지역은 '건강문제'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소외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7.6%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2005년에는 16.1%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3〉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연금수급자 비율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자료: 보건복지부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10년 안에 생산가능인구 감소(2017년), 고령사회 진입(2018년), 총인구 감소(2019년) 등 인구 변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해, 부양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심화 등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 또한 그 무게를 더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국가적 차원의 대비와 국민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시급한 이유다. 나라경제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맞벌이·베이비붐 세대가 정책의 초점

-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이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2050년 노인인구 비율은 38.2%로 세계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는 노동공급 축소와 질 저하, 소비위축을 가져와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양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심화도 촉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제1차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시행해 왔으며, 올해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대폭 확대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가족(그중에서도 여성)에게 출산·양육 책임을 전가했던 것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 부담하는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유와 공감대를 확산했다. 다양한 보육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비지원률을 높였으며(2005년 21.9% → 2010년 42%), 산전후 휴가 법제화, 육아휴직 법제화,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 도입(2008년)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출범(2009년 6월 9일)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 기반도 마련했다.

고령화 분야는 노인의 소득보장과 요양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큰 틀을 구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기초노령연금제도(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5%를 지급하는 무기여연금) 도입을 통해 노인의 기본적 소득보장을 실현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소득보장 수혜율이 2009

년 84.3%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나타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 또한 노인요양보장체계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 참여의 점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환경 조성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으로 여성노동자의 상당수가 출산기의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53세로 조기퇴직 관행이 여전하다. 맞벌이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사각지대가 존재해 국민체감이 저조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정책대상을 맞벌이가정 및 베이비붐 세대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에 집중해 점진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저출산 분야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해 출산 및 육아기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 부담 경감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폭 확대(2011년)해 고소득층 30%를 제외하고는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 여성의 고용기회 평등이라는 공정사회 실현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수당을 확대(만0~1세, 10만원 → 만0~2세, 20~10만원)해 맞벌이가정뿐 아니라 전업주부가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를 늘리고,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했으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도 인하해 자

너가 많을수록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강화했다. 새롭게 부부로 출발하는 젊은층의 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3천만원→3,500만원)했다.

임대주택 전체 공급의 5%를 고령자에게 공급

고령화 분야는 중·고령층에 대한 사전예방적·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54세부터 최대 6년간 지원을 50세부터 최대 8년간 지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현재 평균 57세인 퇴직연령을 늦추고자 한다. 은퇴 이후 생활자금으로 쓰여야 할 퇴직금이 대부분 중간정산, 일시금으로 소진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 사업장의 퇴직연금 우선 설정의무 부여 및 소득공제 확대(300만원→400만원) 등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노인이 되기 전부터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 중심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할 것이며, 노인틀니 보험적용 검토(2012년, 75세 이상) 및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 등 노인의료보장도 강화할 것이다. 노인 일자리의 단계적 확대(2010년 18만6천개→2011년 20만개) 및 농촌 고령자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농지연금 시행은 취약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임대주택의 5%) 및 노인돌봄서비스 확대(2010년 16만5천명→2011년 17만6천명) 등 고령친화적 환경조성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우수 외국인력 유치 및 취업지원관 배치 등 대학 취업지원을 강화해 고령사회 잠재인력 활용을 제고하고, 고령사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주택수급계획 수립,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등 사회 각 분야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구의 날(7월 11일)'을 제정하고, 전국 총 5천여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 활성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범국민 차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풀뿌리 사회운동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TV·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 및

〈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중점과제

분야	중점 과제
휴가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복귀 인센티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개선 스마트워크센터 도입 및 확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확산
가족형성 여건조성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임신·출산 지원 확대	분만취약지 보건의로 인프라 지원 확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다자녀가장 공무원 퇴직후 재고용 다자녀가정 세제, 주택, 학비 지원 확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아동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이동학대 예방) Wee프로젝트(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아동정책 기반조성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학교·사회단체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및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다양하고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고령사회 대응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종교계·시민사회·기업 등 일상생활을 둘러싼 모든 분야의 주체들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 전 국민,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며,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점점 커져 갈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꿈



임인택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장
lityk@hanmail.net

2015년까지 공무원 30%가 스마트워크 참여



지난 7월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이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워크(Smartwork)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 모두가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퇴근해 일하는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활용해 일한다. 재택근무, 모바일을 활용한 현장근무, 집 근처에 만들어진 스마트워크센터에서의 근무 등이 그 예다. 이런 스마트워크는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을 감소시키고 개인 또는 가정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네트워크를 통해 협업할 수 있는 집합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네덜란드 스마트워크센터, 비즈니스 중심지로 빠르게 변모

미국은 연방 공무원 중 8.7%(2008년)가 월 1회 이상 스마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 중에서 스마트

워크가 가능한 직원은 약 60%(총무청 85.8%) 정도다. 총무청(GSA)은 2010년 스마트워크 참여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워싱턴 DC 인근 14곳에 운영 중인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해 스마트워크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네덜란드에서는 2008년 암스테르담시 인근에 스마트워크센터가 처음 개소한 후 현재 전국적으로 99개가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집과 회사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제3의 공간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주거지에서 자전거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창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연한 업무 공간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소 제공한다. 그밖에 회의실, 육아시설, 레스토랑, 바(Bar)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의 성공요인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에 있다. 민·관이 참여하는 '더블 유 스마트워크 파운데이션' (Double U Smartwork Foundation)은 스마트워크센터 총괄 관리 및 인증기관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증강현실(떨자 주;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와 GPS를 활용하여 실제영상과 공간정보를 혼합하여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반의 스마트워크센터 위치검색 서비스(www.worksnug.com)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국 BT(브리티시 텔레콤)사는 직원의 87%가 스마트워크에 참여해 생산성이 20% 증가했다. 사무실 운영비용 감소로 인한 연간 비용절감은 1조원에 이른다. 업무 만족도가 50% 증가하고, 출산 후 복귀율이 99%(업계평균 47%)로 우수한 여성경력직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영상회의 활용으로 탄소 약 10만톤을 저감하고 있다. BT는 이런 경험과 'BT 워크스타일' (Workstyle)이라는 솔루션을 상품화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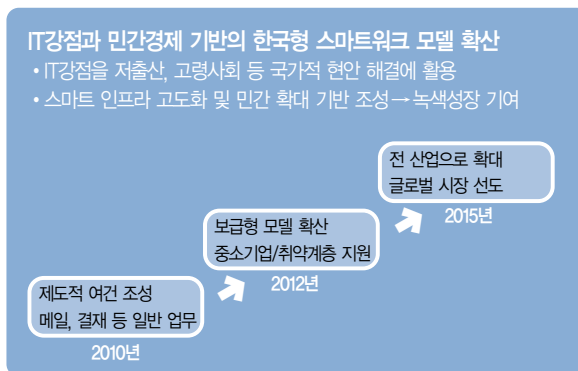
2015년까지 50개소 공공 스마트워크센터 개설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스마트워크 확산 추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국가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대통령 보고회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2015년까지 공무원의 30%가 스마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하고, 민간으로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보고 이후,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스마트워크 지원센터가 설치됐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스마트워크 추진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우선, 도봉구청과 분당 KT지사 2개소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는 50개로 확장할 예정이다. 또 부처별 실국장급 위주의 정책 협의회를 만들어 워킹맘 등의 유연근무 권리보장 및 성과 중심 평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해, '스마트워크 인증·축진·지원 법률'(가칭)을 제정해 개인의 스마트워크 권리, 기업에 대한 인증·축진·지원방안을 규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워크 민간 확산을 위해, 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그림〉 스마트워크 추진목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속에 이미 KT는 자체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고 전사적 스마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전국에 30개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K도 계열사 전체에 모바일오피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스마트 폰', '스마트 TV', '스마트 컨슈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은 좀 더 영리하고, 나은(better) 것을 추구하려는 가치의 반영이다. 특히, 스마트워크는 일·장소·시간 등에 사람이 통제받던 것을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일을 통제하며, 상호신뢰를 토대로 자유롭고 창의롭게 협업해 성과를 향상하려는 생산 향상의 기본적 관점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활용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제는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구체적으로는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의 증대, 개인 스스로의 시간 증대,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할 스마트워크를 추진할 시점이다.

한편 스마트워크는 출퇴근 교통유발 감소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며, 재난·재해 등의 위기 시에도 지속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협업 기반의 능동적·창조적 일하기를 가능하게 해 선진 스마트코리아 구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미래경제



강유민
행정안전부 유비쿼터스기획과장
sshrikk@mopas.go.kr

“친구들이 오히려 부러워하더군요”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사상 처음 3만명을 넘어섰다. 2002년 3,763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7년 만에 10배가량 늘어난 셈. 같은 기간 동안 남성 육아휴직자 역시 78명에서 502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2% 이내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09년 1월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40세)을 만나 아직은 희소한 아빠 육아경험을 들어봤다.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아내가 혼자서 영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1년 반 정도 필드워크(field work; 현장연구)를 겸해 한국에 나오게 됐다. 그때 계획하지 않던 아이가 태어났다. 공부를 마치기 위해 아내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아이를 떼 놓고 갈 수 없어, 내가 육아휴직을 내고 아내와 함께 영국에 가서 아이를 돌봤다.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부모님들께 부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양가 부모님들이 연로하셨다. 부탁을 드릴 상황이 아니었다. 또 그렇지 않았다 해도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가능하다면 둘이서 해결하자는 생각이었다. 육아휴직제도가 없다면 모를까, 있는데 부탁을 드린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주위의 반응은 어땠나.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 결정을 믿고 존중해 주셨다. 다만, 우리 부모님은 생활비가 걱정되었는지 6개월은 봐주시겠다고 했다(웃음).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많이 부러워했다. 민간 부문에 있다 보니 육아휴직에 나설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육아휴직을 낼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

보통 연구소는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이 잡힌다. 육아휴직을 낸 것이 1월 말이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 업무공백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었던 것 같다. 아마 민간 부문이었다면 눈치를 봤을 거다. 그런 점에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가장 휴직을 한 건데 생활비가 걱정되진 않았나?

아내가 받은 장학금하고 저축해 놓은 것을 찾아 썼다. 매달 50만원씩 나오는 육아휴직수당은 한꺼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돌아와서 신청했다. 그 돈을 받아 다시 월급을 받기 전까지 생활비로 썼다. 수당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저축이 없었다면 수당만 가지고 생활하긴 어려웠을 거다.

보통 아빠들이 아이 보는 것을 아주 힘들어 하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 어땠나?

역시 힘들더라(웃음). 아이를 생후 7개월부터 19개월

까지 키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한시도 눈을 땔 수가 없었다. 무슨 사고를 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나도 공부를 할 생각이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내 시간을 정적으로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포기했다. 처음엔 그게 스트레스였다.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아이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어찌 보면 평생에 한 번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육아에 전념했다.

아내하고 아이를 키우는 방식 등 의견 차이는 없었나?

육아에 관한 한 우리 둘 다 초보였다. 서툰 것 투성이라서 의견 차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주로 아내가 하지는 대로 따라 갔다. 모유수유나 천 기저귀 사용 문제, 이유식 등 모두 아내 의견에 따랐다. 의견이 다를 땐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

초보 아빠, 엄마가 낯선 외국에서 애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육아정보는 어디서 얻었나?

아내가 공부한 곳이 영국인데, 사회적으로 육아지원이 잘 돼 있었다. 육아전문 간호사가 1주일에 한 번 지역 보건소에 온다. 이때 아이를 데리고 가면 몸무게, 키 등 발육상태를 체크해 주고, 상담도 해준다. 또한 GP(General Practitioner; 우리나라의 보건소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의료기관)에 등록하면 육아전문 간호사가 처음 한 번 집을 방문하게 돼 있다. 이때 목욕시키는 법, 이유식 만드는 법, 재우는 법 등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것들을 1~2시간 동안 가르쳐준다.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끊어진 부모와의 연대를 영국은 사회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육아를 보는 시각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애를 키우는 데 엄마가 아빠보다 수월한 점이 있는 것 같다. 모유수유를 해서 그런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엄마와 아이 사이에 파고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더 많은데도 아내가 나보다 밥도, 잠도 더 수월하게 먹고, 재우는 것을 보면, 성 역할에 편견은 없지만 그런 면에서 남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아이가 하나인데 둘째 계획은 없나?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아내가 나이도 있고 일자리도 잡아야 하고, 지금 아이를 낳으면 아내가 자신의 경력을 갖는 데 단절이 있게 된다. 내가 육아휴직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업주인 것 같다. 2002년에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기업주라든가 일반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대답했는데, 나중에 후회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바뀌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다. 기업주의 의식이 바뀌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바뀌지 않을 거라도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기다려야 하겠지만, 육아부담 때문에 저출산이 되고 그것이 사회가 유지되는 데 부담이 된다면 뭔가 강제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저출산 추세가 개선될 것 같은가?

도움은 되리라고 본다. 하지만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일례로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올렸는데,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충분한 정도는 아니다. 물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비용적인 요인에만 있는 것은 아닐 거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 이유, 즉 회피할 수 있는 환경을 너무 잘 만들어 놓았다는 거다. 육아부담만 해도 그렇다. 여자의 직장생활이 결혼의 필수조건이 된 지금 누군가는 애를 봐줘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면 애를 못낳는다. 이런 문제에 우리는 여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하루빨리 사회화해야 한다.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젊은 부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이를 낳고 나서 생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개개인 한명 한명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느꼈다. 아마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도 크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물론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충분히 경험해 볼 만한 행복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의경제

저출산 파고 넘으려면 미혼모 문제부터

2007년 우리나라의 혼외출산율은 1.5%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참고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미국은 각각 54.7%, 50.4%, 43.7%, 38.5%이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사회는 혼외출산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자국 아동을 해외입양이라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1년 이후 1.3명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2009년 사이 해외로 입양된 아기의 수는 1만6,985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1,125명을 해외로 보내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국에 입양을 많이 보내는 국가가 됐다. 한국사회는 저출산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도 한 해 1천명 이상의 자국 아동을 입양 보내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해외입양의 대다수가 미혼모 자녀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혼모들은 자녀를 포기한다. 한국에 돌아와 친부모를 찾는 입양인의 이야기는 신문·방송을 통해 널리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어머니인 미혼모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침묵하고 있다. 친어머니를 찾으러 왔다가 성공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은 언어·문화·인종이 다른 사회에서 성장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혼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을 포기한 미혼모 역시 다른 한편에서 죄책감과 회한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는 이유는 미혼모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체계가 미흡하기 때



지난해 5월 10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 '트랙'(TRACK) 회원들이 '미혼모와 입양아동의 인권보호' 촉구 집회에서 한국의 미혼모를 상징하는 인형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문이다. 그동안 해외입양은 미혼모 자녀의 복지를 손쉽게 해결하는 수단이었다. 오랫동안 해외입양에 의존한 결과, 우리 사회는 내부적으로 이들을 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데 게을리하게 됐다.

해외입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우리 정부는 '해외입양 감축과 국내입양 확대'를 우선적 대안으로 삼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에 미혼모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 보인다. 1993년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서는 "국가는 아동이 친가족과 헤어지지 않도록 우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해외입양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출산이 위기라고 외치면서도 자국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자기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라경제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mjnglee@kwidmail.re.kr

저출산 고령사회, 이렇게 넘는다 _ 저출산 대책, 이것이 궁금해요!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100만원

Q: 육아휴직제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A: 현재 월 50만원이 지급되는 정액제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는 출산 전 임금(통상임금)의 40%인 정률제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8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상여와 연차수당 등은 제외된 금액이다. 휴직급여 간 과도한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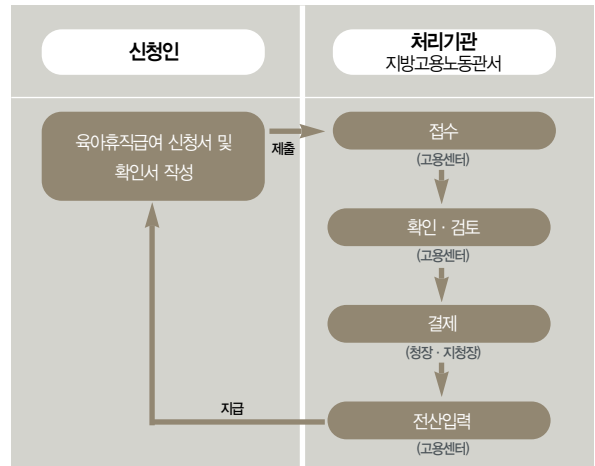
Q: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뀔 때 따라 고임금 근로자에게만 휴직급여가 인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A: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휴직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임금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수준은 근로자마다 다르므로 임금손실을 적절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액제보다는 정률제가 더 적합하다. 독일(67%)·일본(50%) 등 선진국도 정률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휴직급여는 임금수준에 연동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기금이 활용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도 정률제가 적합하다.

Q: 자녀 양육 취약시기인 생후 2년까지의 지원 대책 중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은?

A: '육아기 근로시간 계좌제'가 신설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계좌에 저축한 후 적립된 휴일일수를 육아에 사용하는 제도다. 또한 사업자 재량에 맡겼던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부여해 제도 이용의 기회를 보장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의 명단도 공표한다. 2세까지의 영아 보육료 지원을 소득수준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했고, 베이비시터를 제도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소에서만 무상으로 제공되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일반병원으로까지 확대됐다.

<그림> 육아휴직급여 신청 과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우편제출 가능)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매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Q: 만혼경향이 두드러져 가는데 결혼에 대한 대책은?

A: 결혼누리사이트(<http://www.wed-info.kr>)를 2008년 12월 개설했다. 데이트 장소, 결혼비용시물레이션, 웨딩 체크리스트, 부부생활 팁 등 만남에서 결혼준비, 건강한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다. 학생 부부를 위한 국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도 확대된다. 신규 기숙사 건립 시 기혼자실을 5% 우선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기혼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우선 부여한다.

Q: 기존 1차 대책과 차별화된 다자녀 지원책은?

A: 2011년부터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고교수업료가 지원된다. 둘째아 이상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 우선 대상이다. 자녀 2인의 경우 세제공제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인 초과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비율은 3%에서 5%로 확대됐고,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율은 4.7%에서 4.2%로 추가 인하됐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장 공무원은 퇴직 후 재고용이 추진된다(자녀 1인당 1년, 최대 3년까지). [박원순]

임금피크제, 젊은 직원들이 더 원한다

- 제약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 도입한 유한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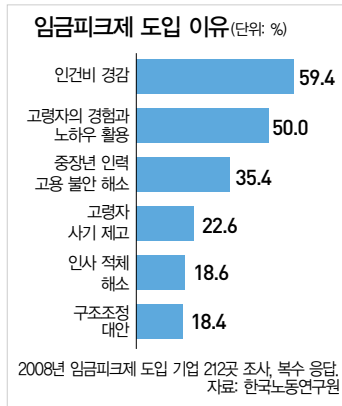
유한양행은 1926년 창사 이래 IMF, 세계 금융위기를 비롯한 어려운 경영환경 아래서도 단 한 차례의 정리해고 없이 84년간 노사 무분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제약업계 최초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1970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약 62세였던 데 비해 현재는 80세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예전의 정년퇴직 연령은 더 이상 고령이 아니지만 정년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정년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존 만 55세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서 만 57세 해당월의 반기 말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존 정년시점까지는 임금을 감액하지 않고 늘어난 기간 동안 기존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이다. 자녀학자금, 경조금 등과 같은 복리후생제도는 새롭게 늘어난 정년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금피크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유한양행은 창사 이래 구조조정이 한 차례도 없었던 만큼 고령화·고직급화 추세의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경영환경에 있어서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경쟁이 가속화됐다. 또한 신약개발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돼 제약업은 전반적으로 성장정체, 저수익구조의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비용 증가, 신규인력의 상대적인 채용 감소, 인사적체 심화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경쟁관계에 있는 제약업계의 다른 회사들이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노사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대응, 근로자들의 요구 증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의 정년퇴직에 따른 불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고,



결국 고용안정을 통해 노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이와 아울러 그간 일정 직급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됐던 성과주의형 임금체계인 연봉제를 전 사원으로 확대 운영했다. 이러한 노사협력의 강화와 성과주의의 확산으로 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져 비용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고용능력 또한 향상시킴으로써 신규채용을 늘려

나가면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에 대해 젊은 사원들의 반대를 우려했으나, 설문 결과 40대 이후보다 20~30대 연령층이 더 높게 정년연장을 바라고 있었다. 50대 이후 선배들 대부분이 자녀의 대학 진학 등으로 씬씀이가 커지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임금피크제는 중년실업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완화해 직무에 몰입할 수 있게 하고, 고령인력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직장생활을 보람차게 마무리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조합과 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노사 상생의 정책과 계획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노조는 사측과 협의해 정년퇴직 전 일정기간 동안 정년설계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정년 이후의 생애 및 노후 설계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리경제]



박광진
유한양행 노조위원장
kwjwpark@yuhan.co.kr

저출산 고령사회, 이렇게 넘는다 _ 임금피크제 전문가 평가

고용유지와 성장을 함께 실현하는 방법



포스코는 지난 10월 25일 직원 정년 임기를 기존 56세에서 58세로 2년 연장하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협의를 마쳤다.

베이비붐 세대의 만행적인 1955년생이 2010년 55세를 맞이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퇴장하기 시작했다. 기업(300인 이상)의 정년은 평균 57세(고용노동부 자료)지만, 주된 일자리에 있어서의 퇴직연령은 53세(통계청, 2009년 5월 자료)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로 임금과 생산성 격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된다. 우리 기업의 지배적인 임금체계는 연공급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연공급적 임금인상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커진다. 전체 근로자 중 40세 이상의 비중은 1990년 24%에서 2000년 32%, 2007년에는 40%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은 정리해고와 연봉제 도입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리해고는 중장기적으로 종업원의 고용불안 증대와 사기 저하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봉제 또한 모든 직종,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일반적으로 삭감)하고, 그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 도입률(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3.3%에서 2008년 5.7%,

2009년 9.2%로 약간 높아졌으나 아직 저조하다.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노동조합의 반대 이외에도 사용자의 소극적 태도,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노사 모두의 인식 부족, 구직자가 구인자보다 많은 현실 등이 거론된다.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에서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시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과도기적 제도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공급이 산업현장에 자리잡고 있다는 현실은 임금체계 개편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저성장시대와 고용불안시대에 노동조합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이다. 특히 60세도 미치지 못하는 정년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의 상향조정(2013년 61세, 이후 5년마다 1세씩 증가, 2033년 65세)을 고려하면 노조도 무조건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년(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의 도입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고령자의 숙련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서야 한다. 근로자 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자신의 직업능력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고령자고용안정전설팅사업, 정년연장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을 통해 중·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최근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구조가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장을 통한 고용'이라는 경로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소득보전-소비-성장' 즉 '고용유지를 통한 성장' 경로를 개척할 필요성이 있다. 임금피크제는 '고용유지를 통한 성장'을 위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미래경제



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junghan@kli.re.kr

*2010년 「나라경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작지만 강한 기업'을 찾아갑니다. 규모는 작지만 알찬 기술력과 도전정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히트 챔피언. 그들의 숨은 노력과 성공비결, 관련업계 동향까지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가능성과 저력을 점검해봅니다.

친환경 색종이 연필, 215년 연필의 역사를 바꾸다

굿필코리아 문구전문 제조기업

점 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데이비드 드 로스차일드(David De Rothschild)는 그의 책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남는 유쾌한 생활습관 77」에서 나무 심기가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나무는 자라면서 대기 중의 탄소를 서서히 제거한다. 나무를 베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재활용 종이와 생분해 수지로 학용품을 만들어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문구전문 제조회사 굿필코리아다.

‘친환경+디자인’으로 문구류 시장에 도전

굿필코리아는 2008년 친환경 색종이 연필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폐·재생지를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색종이 연필 ‘그린필’ 시리즈가 그것. 나무가 아닌 재생지를 사용하므로 사막화를 방지하고 천연자원의 보존을 돕는다. 일반연필과 달리 99% 전분풀을 사용해 인체에도 무해하다. 자연에서 생분해되므로 토양이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굿필코리아는 ‘그린필’로 2009년 미국에서 열린 문구·선물용품 박람회 LA 기프트쇼에서 친환경 제품에 주는 ‘지속 가능성·공정무역 부문 스타상’(Sustainable or Fair Trade STAR Award)을 수상했다. 미국·호주·프랑스·파나마로부터 샘플 주문만 약 10만달러 정도 따냈다. 내년 500만달러, 2012년 천만달러 수출이 목표다.

박길서 굿필코리아 대표(53세)를 ‘저탄소 녹색성장



박길서 굿필코리아 대표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에서 만났다. 박 대표는 지난 10월 6일 ‘2010 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그는 굿필코리아의 이 같은 성공 비결이 한 길을 걸어 오면서 쌓았던 노하우와 기술 때문이라고 말한다. 1977

년 동양산업으로 출발해 모나미에 연필, 자, 지우개를 OEM으로 제조·납품했다. 하지만 모나미 제조공장들이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보고 자신만의 기술로 학용품을 만들고 싶었다.

“6년 전쯤 신문에서 환경파괴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미래의 화두는 지구환경 보호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박 대표는 2004년 굿펠코리아로 회사명을 바꾸고 3년에 걸쳐 그린필의 색종이 연필을 개발한다. 215년 나무 연필의 역사를 바꾼 것이다.

연필이 너무 예쁘지 않냐고 묻는 박 대표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친환경 제품이라도 디자인이 예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파스텔 색상에 얼룩말 무늬를 입혀 쓰는 사람의 기분을 산뜻하게 한다. 연필의 몸체가 좋아서 맘을 흡수하고 손에 쥐는 느낌도 부드럽다.

어린이의 건강을 생각한 것도 성공에 큰 몫을 했다. “아이들은 크레파스를 먹기도 하고 입에 물기도 하잖아요. 연필, 지우개는 물론이구요. 그래서 물거나 먹어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린필 팝콘 지우개, 천연 식물성 오일로 만들어진 그린필 퓨리티 크레용 등은 무독성 제품이다. 플라스틱이 아닌 생분해성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자와 필통도 있다. “아이들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건강과 교육, 일석이조죠.”

문구류 시장에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접목해 기술혁신을 이룬 굿펠코리아는 세계시장에서 리브콜을 받고 있다. 올해 5월 뉴욕 국제 문구 박람회(NSS)에 나간 뒤 세계적인 침팬지 연구자이며 환경운동가의 이름을 본따 만든 영국의 제인 구달(Jane Goodall) 연구소로부터 라이선싱 제안을 받았다. 제인 구달 연구소와 캐릭터 라이선싱을 체결한 굿펠코리아는 올해 말 친환경 학용품세트 테이내비비 그린필을 출시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고양이 캐릭터 ‘가필드’와도 라이선싱 계약을 맺었다. 친환경을 주제로 기획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콘셉트가 그린필과 꼭 맞았던 것. ‘가필드 그린필’은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가필드나 제인 구달 캐릭터로 판매되면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세계시장에서 더 경쟁력이 세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샘플 판매동향을 살피고 있는



본드와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품으로 만든 굿펠코리아의 친환경 연필과 색연필은 나무보다 그림감이 좋아 오랜 시간 사용해도 미끄러지지 않고, 땀 흡수력이 좋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독점계약을 제안해 올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15개국 이상에서 주문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늘 10년 뒤를 준비합니다”

국내 문구류 시장은 1990년대부터 일본 제품의 인기로 침체된 지 오래다. 박 대표는 이런 상황에 주눅 들기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도전했다.

굿펠코리아는 총매출의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중소기업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다. 별도의 연구인력도 고용했다. “향후 10년간 성장동력은 원천소재밖에 없다고 생각해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연구소 중심의 공장도 만들고 있다. 개발에 대한 열정은 굿펠코리아가 보유한 특허에서도 나타난다. 21개의 특허가 있고, 올해 3개가 출원 예정이다.

박 대표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신생 기업은 많지만 30년된 회사는 적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발전하는 장수기업들이 많아져 우리 경제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을 도우며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 녹색 책상 만들기 캠페인으로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도 알리고 있다.

꿈에서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어나서 메모를 한다는 박 대표. 늘 깨어서 10년 뒤를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는 그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미래경제

성장과 도태의 갈림길, 적극적으로 신시장 모색해야

문구산업 동향

지난 9월 29일 바른손은 '베니건스'로 잘 알려진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와이즈온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바른손의 외식사업 진출은 새삼스런 소식이 아니었다. 문구산업을 벗어나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오던 바른손의 행보와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결정이었다. 그동안 국내 주요 문구업체들은 컴퓨터 소모품 수입·유통사업 진출, 생활용품 산업으로 영역확장 등을 통해 수익처 다변화를 모색해왔다. 이런 한눈팔기는 문구산업의 미래에 대한 기업들의 위기감을 대변한다.

외국 문구업체들의 공세 앞에서 오랫동안 국내 기업들은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필기구의 경우 일본제품의 점유율이 70%에 이르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문구 최대 소비자층이었던 학생수마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문구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국내 초·중·고등학생수는 2007년 773만명에서 2009년 744만명으로 빠르게 줄고 있다. 이에 2006년 1,153개에 이르던 문구 생산업체수는 2008년 593개까지 쪼그라들었다. 생산액도 3년새 5.8%가량 줄어든 3조1,493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문구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기술력에서 선진국에 사실상 10년가량 뒤쳐져 있던 필기구 분야의 경우 최근 국내 업체들의 약진이 눈부시다. 모닝글로리는 지난해 '마하펜'을 내놓고 틈새시장인 수성펜 시장에서 지금까지 500만 지루의 판매고를 올렸다. 바른손, 모나미도 유성펜과 중성펜의 장점을 혼합한 초저점도 유성펜 개발에 성공해 일본제품에 잠식당했던 시장 되찾기에 나섰다.

디자인문구 개발을 통한 성인소비자 개척 작업도 활발하다. 디자인문구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기본으로 해 부가가치가 높고, 20~30대를 주요 소비자층으로 삼아 시장



디자인문구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기본으로 하며, 고가의 기기를 꾸미는 전용 케이스, 정전식 펜 등 전자기기 액세서리 시장이 그중 하나이다.

이 넓다. 디자인문구 시장은 줄어드는 학생문구 시장을 대체할 만큼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미 2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시장이 형성돼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전자기기 액세서리도 전략 제품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기의 발전은 종이, 펜 등의 수요를 위축시켜 문구시장을 잠식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고가의 기기를 꾸미는 데 투자를 마다하지 않는 소비자층이 늘면서 전용 케이스, 정전식 펜 등 전자기기 액세서리 시장은 점차 커지는 추세다.

이처럼 국내 문구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아닌 성장과 도태의 갈림길에 가깝다. 전통적 소비자층과 제품군의 틀이 뒤바뀌는 격변기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시장을 모색한다면 국내 문구 업계에도 새로운 성장 가능성은 열려 있다. [나라경제]



연유진

서울경제신문 성장기업부 기자
economicus@sed.co.kr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요즘 가전제품 살 때 소비자들은 에너지효율부터 따진다. 에너지효율이 높으면 그만큼 전기료가 절약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에너지효율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는 1992년 도입됐다. 냉장고, 에어컨 등 4개 품목에서 시작해 현재는 24개 품목, 2단계 모델로 확대됐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변화에 맞춰 2008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표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아파트에도 에너지효율등급을 매길 계획이다.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나라경제」는 정책담당자를 만나 정책의 지향점을 들어보고,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국내 가전 에너지효율, 세계 최고된 까닭은?

우리나라는 기기·설비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등 세 가지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 제품은 시장에 이미 보급된 가전기기가 주 대상이고,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사무기기가 대부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LED 조명기기처럼 시장진입을 지원해야 하는 품목 위주로 운영된다. 초기엔 고효율인증제 대상이었다가 시장에 잘 진입하면 에너지효율등급 대상이 되는 식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절감의 트라이앵글 중 대표는 단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다. 1992년 9월 1일, 제일 먼저 시작됐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1등급에서 낮은 5등급까지 라벨을 부착하게 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이나 판매가 금지된다. 국내 제조업자는 물론 수입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에 비해 평균 30~40%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라벨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이 직접 붙인다. 정부가 지정한 효율관리시험기관 중 한 곳에서 효율등급신고용 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받는다. 이 결과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고 등급라벨을 만들어 제품에 붙이면 시장에서 유통시킬 수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엔 냉장고, 에어컨 등 4개 품목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24개 품목, 2만개 모델에 이르게 됐다. 내년에는 텔레비전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1992년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형광램프 등에 의무적으로 부착되는 표식이다. 지난 2008년 라벨의 디자인을 변경해 가시성을 높이고, 에너지효율 정보와 CO₂의 발생량까지 알 수 있게 했다.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생활가전을 구입할 때 쉽게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에너지효율등급표시는 꾸준히 진화하는 중이다. 정부는 2008년 이산화탄소배출량 표시, 2010년 연간 에너지비용 표시를 도입하고, 이를 품목별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적인 아파트 등 신규 건축물에도 에너지효율등급 획득을 의무화해 설계부터 고효율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려 한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에너지절감기술은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기기 분야의 에너지효율은 세계 정상급 수준이다. 지난 2008년 3월 G8정상회의 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근 비교적 단기간에 의무적인 효율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보다 잘 개발된 국가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통합시켰으며,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경고라벨 부착 의무화를 통해 경각심을 일으키는 등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를 비롯한 고효율기기로의 전환은 국내 기술수준 향상과 에너지절약에 필수적 요소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시키기에도 적합하다.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해 세계 각국이 기술기준을 세우고 있는 만큼 국제공조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1등급 제품 만들려는 기업의지 강해졌죠”

성시내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나?

그해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이 채택되면서 에너지소비효율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다. 더욱이 미국,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표기하는 것을 보고 발 빠르게 대응했다.

어떤 효과를 기대했나?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한눈에 에너지효율을 알 수 있게 하려 했다. 처음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 4개를 대상으로 했다가 지금은 자동차를 포함해 24개가 대상이다.

효율등급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하다.

품목별로 성능과 효율성, 시장분포, 해외기술동향 등을 분석한다. 이 때 가급적 등급비중이 정규분포를 이루게 한다. 3등급이 가장 많고 1등급은 10% 미만인 상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등급이 점점 많아진다. 1등급 제품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 등급을 조정해서 다시 정규분포를 만든다. 등급조정 때는 공청회를 거쳐 업체 의견을 반영한다. 보통 3년에 1번 정도 등급조정을 했는데 기술개발 속도에 따라 조정시기가 달라진다.

그럼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겠다. 등급조정을 자주 하는 이유는?

제품 간 차별성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시장에 대부분 제품이 1등급이면 의미가 없지 않나. 올해도 한 차례 등급조정이 있었다.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크겠다.

기업 스스로 1등급 제품을 생산하려는 욕구가 상당하다. 소비자에게 1등급 제품을 만든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인 것 같다.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냐고들 하



시는데 기업 측 의견을 많이 듣는다. 기술개발 비용이 너무 높으면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선을 찾는다.

효율등급이 낮으면 기업체에 패널티가 있는 건가?

효율등급 5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생산이나 판매가 안 된다. 저효율 기기를 막으려는 거다. 5등급 이내에서는 어떤 등급을 받아도 상관없다. 물론 1, 2등급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다. 공공기관이 해당 품목을 구매해야

할 경우 우선구매한다.

제도 시행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 제도는 이미 정착돼 별 문제는 없다. 그런데 간혹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다. 제품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업체가 고의로 시험기관에 평가를 받을 때와 다른 부품을 사용하거나 하면 알아채기 어렵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사후관리 품목 수나 규모가 큰 편이긴 하다. 매년 사후관리 예산과 인력, 시간을 편성해서 실제 구입, 검사하고 잘못된 등급표기가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한다. 판매불가 제품이 유통되면 최고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18년이나 됐기 때문에 대부분 소비자들이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를 인식하고 있다. 또 등급기준을 바꿔도 기업이 금세 1등급 제품을 내놓는 것을 보면 1등급 제품생산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소비자 선택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강화된 것을 느낄 수 있다.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도 높아졌다. 곧 제도 도입 20년이 되니 제도의 효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해볼 계획이다. [나리경제]

제품 경쟁력에 긍정적 ... 잦은 등급강화는 부담

이장희 대우일렉 CTO 상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좋은 점은?

제품의 소비효율을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차별화가 가능해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 소비효율을 위한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기업의 매출증대에도 긍정적이다.

5등급 안에만 들면 생산이나 판매에 문제가 없는데 기업이 1등급 제품생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소비자들이 같은 가격이면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호하므로 기업은 1등급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시장에서는 1등급 제품을 유난히 선호한다. 광고 및 제품 판매 시 1등급을 강조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1등급이 아닌 제품은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등급조정에서 1등급이 2등급으로 떨어진 적도 있나?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2008년 4월에 냉장고 소비효율 시험기준이 변경되면서 1등급 제품이 2~3등급으로 하락했다. 2011년 1월부터는 냉장고, 세탁기 효율기준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등급하락이 우려된다. 업체로서는 기준이 강화될 때마다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형편이다. 효율 증대를 위한 신기술 개발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수출제품도 등급표시제를 따르나? 5등급 안에만 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국제기준이 같은지 궁금하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는 국가별로 시험방법이나 기준이 다 다르다. 수출제품에도 등급을 표시하지만 통용되진 않는다. 국내 기준 5등급이라 하더라도 어느 국가에서는 상위등급일 수 있고, 어느 국가에서는 기준 미달인 등급일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효율 향상에 많



은 관심을 갖고 있고,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의 경우 냉장고는 2010년 7월부터 A등급 이상만 판매가 가능하고, 세탁기도 2011년 후반부터는 A등급 이상만 판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고효율제품 사용이 환경이나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좋은 것은 사실이나 결국 제품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품이나 제품은 새로운 투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제품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기준 강화에 따른 효율 향상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효율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제도 이행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도의 개정이 너무 잦다. 실제로 2007년 이후 해마다 등급강화를 하고 있다. 에너지라벨의 경우도 변경사항이 잦아서 혼란스럽고, 대처하기에도 애로사항이 많다. 기술개발을 통해 효율향상을 애써 달성하면, 정부에서는 시장에 1등급이 많다는 이유로 등급을 강화해 기술개발 의욕이 저하되는 측면도 있다.

에너지효율등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 톱(top) 수준 정도로 소비효율이 많이 향상됐다. 이제는 고효율제품을 개발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만 기준을 맞춰도 국가별로 시험과 개선을 진행하는 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에도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나라경제

효율등급 표시품목 더 늘려야

국 제에너지기구(IEA)가 분석한 2030년까지의 CO₂ 배출량 감축잠재량에는 기기·설비(조명 포함) 부문의 비중이 무려 45%에 이른다.

이는 에너지절약 정책 중에서도 기기·설비 에너지 효율향상이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미달제품은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에 포함돼 있는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2년 제도 시행 이후 기기·설비 분야의 효율향상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향상은 가장 성공적인 사례다. 지속적인 효율기준 강화를 추진한 결과, 2009년 냉장고의 1L당 연간소비전력량(연간 kWh/L)은 1996년 대비 13년 동안 60%나 감축됐다. 또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호주, 한국 등 국제에너지기구(IEA) 산하 7개국의 'IEA 4E Mapping & Benchmarking Annex'(에너지 효율 비교 국제프로젝트)에서 냉장고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 에너지효율 국제비교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냉장고 에너지효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미국(Energy Star), 캐나다, 호주, 유럽국가 순이었다.

에어컨의 경우도 에너지효율이 크게 개선된 품목이다. 2009년도 에어컨의 냉방효율(EER; Energy Efficiency Ratio)은 1996년 대비 13년 동안 21%가 향상됐다. 2009년도 드럼세탁기의 소비전력량(Wh/kg)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시행년도인 2006년 대비 3년 만에 20%가 감소했다.

하지만 가전기기와는 달리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삼

상 유도전동기, 가정용 가스보일러, 조명기기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수준이다. 삼상 유도전동기는 단일기기로 국가 전력량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기기로서 고효율로의 전환이 필수였다. 2008년 7월 1일부터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조정을 통해 고효율전동기 생산·판매를 의무화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었다.

전체 도시가스 사용량의 40%를 차지하는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콘덴싱 가스보일러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를 시행한 상태다.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생산·판매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높여 2013년에 퇴출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은 여전히 에너지효율이 낮다. 에너지 다소비기기 중에서도 송배전 설비의 필수설비로 전체 전력사용량의 2.6~3.1%의 손실을 차지하는 변압기, 건물 열손실의 20~45%를 차지하는 창세트, 가정에서 냉장고 다음으로 전력소비량이 많은 TV는 에너지효율화가 매우 중요한 기기다. 정부는 변압기·창세트·TV에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기술표준화 연구 및 관련 제조업체와의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에너지 다소비기기를 중심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품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통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의 정책



김영래
에너지관리공단 효율표준실 팀장
yrkim@kemco.or.kr

녹색구매 촉진하는 환경라벨링

“소비자가 바뀌면 기업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지구도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장에 어떤 상품을 채워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A마트사 환경경영전략팀장인 박 본부장이 매장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라는 소비자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라벨링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블루마트를 상징하는 환경캐릭터를 자체 제작해 친환경 제품에 부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 대리가 ‘환경라벨링제도’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좋은 의견이군요. 환경라벨링제도는 소비자에게 녹색구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 그린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 부장이 말했다.

“친환경 상품이 많이 노출되고 또 직접 체험해봐야 해요.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은 비싼 친환경제품을 선뜻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 본부장이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과일 장수의 상술을 빌리는 것이 어떨까요?” 유 부장이 본부장의 걱정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과일 장수는 ‘일단 잡숴주세요’ 하며 먹여보게 합니다. 우리도 블루마트가 만든 주요 자사브랜드(PB; Private Brand) 친환경 제품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매장에 나가 보면,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이라도 새로운 제품을 선뜻 선택하지 않아요.” 현장 경험이 많은 김 대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후불제 마케팅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친환경 제품은 가격이 다소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중한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 반환이 가능하다면 소비자 접촉이 늘어날 겁니다.” 유 부장이 시원스레 대답했다.

서 대리는 ‘생산이력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전자태그(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 인식을 도입해 친환경 농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고객이 상품 정보를 매장에서 확인해 구매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마케팅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제품과 생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박 본부장이 서 대리의 아이디어에 만족하며 말했다. 나라경제



환경라벨링제도

환경라벨링제도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기업체가 환경 친화적 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촉진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환경 친화적 제품을 선택·사용하게 해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환경라벨링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환경 성적이 우수한 제품에 일정한 표시를 가능하게 인증하는 방식(Type I), 기업의 독자적 환경성 주장을 제품에 표시하는 방식(Type II), 모든 제품에 환경성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식(Type III)이 그것이다.

‘Type I’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환경마크제도’이다. ‘Type II’는 생산자 자신이 제품의 환경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조건 등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Type III’은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해·도표·그래프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환경성적표지제도’이다.



유복환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연세대, 영국 캠브리지대 석·박사(경제정책 전공)
기획재정부에서 녹색성장정책 등 주요 경제사회정책의 기획과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처교류로 환경부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첫 스토리텔링 환경경영 이야기책인 「그린 이즈 머니(Green is money)」를 썼다.
bhyu7@hanmail.net

제8회 전국 고교생

경제한마당



일시 2011. 1. 15(토)

☑ 13:30 ~ 16:00

접수 2010. 11. 1(월) ~ 12. 10(금)

참가신청

참가대상

전국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개인 및 단체

접수방법

홈페이지 (<http://click.kdi.re.kr>) 또는 우편

시험장소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인천 / 수원 / 전주 / 제주

진행본부

☎ 02-958-4668 ~ 70 ✉ ecoexam@kdi.re.kr

시상내용

	상명	인원	시상내역
개인상	대상	1명	기획재정부장관상, 장학금 600만원
	금상	2명	대회장상/한국경제교육협회장상, 장학금 각 400만원
	은상	8명	후원기관장상, 장학금 각 200만원
	동상	50명	대회장상, 장학금 각 30만원
	장려상	응시 인원의 5%	대회장상, 부상
단체상	대상	1개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학교발전기금 500만원
	우수상	16개교	대회장상, 시·도 교육감 표창, 학교발전기금 각 100만원
	장려상	16개교	대회장상, 시·도 교육감 표창, 학교발전기금 각 50만원
지도교사상	50개교	시·도 교육감상 또는 대회장상, 부상	

1) 개인부문 장려상 수상자 수는 학교계열별(일반고, 특목고, 전문계) 응시비율에 따라 배분
2) 학교계열별 분리는 대회 기준에 따름



목돈이 마련되면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라

“지 금 주식(또는 주식형 펀드)을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투자교육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다. 질문은 결국 주가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오른다면 사고 떨어진다면 팔겠다는 속셈이다.

그런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할 수는 없다. 펀드를 사고파는 데는 주가 전망보다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형편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모르고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적립투자를 하고 있다면 5천만원이나 1억원 정도의 목돈이 마련될 때까지는 단기 시황에 신경 쓰지 말고 투자를 계속하라고 조언한다. 투자자가 오랫동안 적립식 투자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목돈이 마련됐거나 또 다른 이유로 이미 목돈을 갖고 있다면 자신의 형편에 맞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것을 권고한다.

나이·재산·직업 등 자신의 형편 고려해야

포트폴리오는 금융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짜야 한다. 형편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나이, 재산상태, 직업의 안정도, 가족상황, 자신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투자기간 등을 들 수 있다.

젊은 세대는 노년세대보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와 같은 공격적인 상품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같은 나이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도 괜찮다. 투자성향이 적극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보다, 투자경험이 많은 투자자는 많지 않은 투자자보다, 자금을 써야 할 때까지의 기간이 긴 투자자는 짧은 투자자보다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짤 수 있다.



최근에는 제대로 된 금융기관에 가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먼저 투자자의 형편을 체크하는 설문지를 준다. 앞에 예를 든 요소들을 반영시킨 설문지다. 투자자들은 이런 설문지 작성을 귀찮아하지 말고 성의껏 답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 올바른 조언을 들 수 있다. 금융기관은 투자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표)와 같은 모델포트폴리오 중에서 하나를 추천해 줄 것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비율대로 해당 펀드를 매입하기만 하면 투자가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 이번에는 그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기간은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등으로 투자자 자신이 정하면 된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떤 50대 투자자가 주식형 펀드 50%, 채권형 펀드 40%, CMA(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자산관

리계좌) 10%의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한 후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기로 했다고 하자. 6개월이 지난 뒤 펀드를 매입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 가서 그동안에 포트폴리오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본다. 그 사이 주가가 많이 올라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65%로 늘어났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형 펀드나 CMA는 주식형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 들어 있을 것이다.

6개월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재조정해 나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은 기준이 되는 비율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있다. 그 사이 재산상태, 가족상황, 투자기간 등 투자자의 형편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투자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커다란 변화이다.

6개월마다 투자비중 조정을

이 경우에는 주식형 펀드의 늘어난 비중 15%만큼을 팔아서 채권형 펀드와 CMA의 줄어든 비중을 메운다. 포트폴리오를 다시 원래의 비율 50:40:10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이것을 포트폴리오의 재조정(rebalancing)이라고 한다. 주가가 너무 올라서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주식형 펀드의 비중은 50%인데 65%로 늘어났기 때문에 원래의 비율로 돌려놓기 위해 15%만큼을 줄이는 것이다.

〈표〉 투자성향별 모델 포트폴리오

원금중시형: 주식형 10%, 채권형 40%, CMA 또는 예금 50%
이자·배당중시형: 주식형 25%, 채권형 50%, CMA 또는 예금 25%
이자·배당 및 시세차익 절충형: 주식형 40%, 채권형 50%, CMA 또는 예금 10%
시세차익중시형: 주식형 65%, 채권형 30%, CMA 또는 예금 5%
시세차익추구형: 주식형 75%, 채권형 20%, CMA 또는 예금 5%

또 6개월이 지나서 계산을 해보니, 이번에는 주가하락으로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40%로 줄어 있을 수가 있다. 반면 채권형 펀드와 CMA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채권형과 CMA의 늘어난 비중만큼을 팔아 주식형 펀드로 옮긴다.

이런 식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재조정해나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은 기준이 되는 비율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있다. 그 사이에 나이, 재산상태, 가족상황, 투자기간 등 투자자의 형편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유산 상속으로 생각지 않았던 재산이 생길 수 있고, 직장이 바뀌면서 월급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집을 살 계획이 생기거나 자녀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경제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투자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커다란 변화이다. 가령 50대였던 투자자가 60세가 돼 정년퇴직을 했다면 주식형 펀드 비중 50%는 60대에겐 리스크가 큰 포트폴리오가 된다. 따라서 60대의 퇴직자에게 맞게 좀더 보수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주식형 펀드는 40%로 줄이고 채권형 펀드와 CMA 비중을 60%로 늘리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할 것이다. 이렇게 투자자의 달라진 형편에 맞도록 포트폴리오의 배분비율 자체를 바꾸는 것을 ‘포트폴리오의 재배분(reallocation)’이라고 한다.

선진 증권시장의 투자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5년, 10년 장기투자를 한다. 오랜 경험을 통해 단기 시황 전망을 근거로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이 방식으로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미래
교육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장

지난 36년 동안 대우증권 동경사무소장, 국제본부장, 리서치본부장, 현대투신운용 대표, 굿모닝투신운용 대표 등을 거치면서 은퇴 및 투자 교육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다. 저서로 「직장인의 노후설계와 퇴직연금」, 「당당한 인생후반 30년을 결정하는 자산관리의 원칙」 등이 있다. chkang@miraeasset.com

‘2010 인구주택총조사’ 꼭 참여하세요!

‘2010 인구주택총조사’가 11월 1일부터 15일간(인터넷조사: 10월 22일~10월 31일) 시행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만1천5천여명의 조사원과 6천명의 공무원이 투입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가기본통계조사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특정한 시점에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사회학적 자료를 수집·평가·분석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조사를 확대했고, IC(손으로 입력한 문자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기술) 방식의 자료처리기법을 도입해 고효율·저비용의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샘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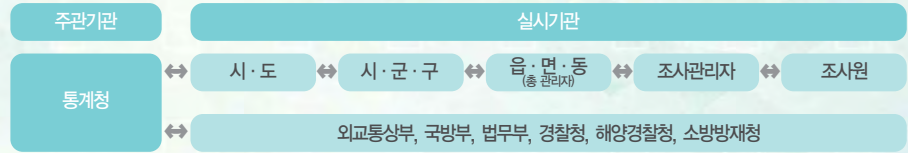
인터넷 조사 강화해 효율성 높여

11월 1일 0시를 기준 시점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빠짐없이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전수 19개, 표본 31개, 총 50개로 구성돼 있다. 조사된 자료는 가구대상 표본조사를 위한 모집단 자료로 활용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 다문화, 외국인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주택보급률, 교통수단 부담률, 장애인구 추

〈표〉 전국조사항목(47개)

		인구(28개)	가구(13개)	주택(6개)
전수항목	5년 주기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	가구구분, 사용방식, 건물 및 거주층, 주거시설형태, 점유형태, 주인가구 및 타지주택 소유 여부	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적, 층방수, 건축연도, 주거시설 수
	신규	국적, 입국연월		
표본항목	5년 주기	아동보육, 5년 전 거주지, 활동지역, 통근학 여부, 통근학 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학 소요시간,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근로장소, 혼인연월, 총 출생아 수, 추가계획 자녀 수, 고령자 생활비 원천	거주기간, 난방시설, 주차장소, 임차료	대지면적
	10년 주기	출생지, 1년 전 거주지, 현 직업 근무연수	수도 및 식수 사용형태,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	
	신규	사회활동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현황	

(그림)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체계도



계에 활용된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료가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상에 발맞춰 조사방법과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의 고령화 가구 증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사생활 보호의식 증가로 인한 어려운 조사환경을 극복하고 매 5년마다 50% 이상씩 증가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인터넷 조사는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통계청은 2005년 14만가구(0.9%)에 불과했던 인터넷 조사 참여를 560만가구(약 30%)로 확대해 응답자의 편의를 높이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해외에서는 2006년 캐나다가 실시한 센서스에서 18.5%, 호주가 9%의 인터넷 조사 응답률을 나타내며 그 효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기술이나 보급률이 세계최고 수준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구마다 제공되는 참여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미 네 번에 걸친 시험조사와, 한 번의 시범예행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인터넷 조사의 정확성은 다른 조사방법(방문면접 조사·우편조사·전화조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인터넷 조사 30% 달성을 목표로 164억 원을 절감한 1천808억원을 전체예산으로 편성했다.

외국인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9개 언어로 조사표 제공

이번 조사에서는 그린센서스 개념을 도입했다. 인터넷 조사 30%를 달성할 경우 종이조사표 약 560만부가 절약된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현황에 차전거 등을 선정했고, 조사지침서·조사사례집 등을 재생용지로 제작했다. 조사원기방 등은 본조사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과 재질에도 신경을 썼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들도 배려했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 9개 언어로 제작된 조사표를 제공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결혼이민자를 조사관리자로 채용하고, 외국인 전용 콜센터(080-200-1345)를 운영하는 등 조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 밖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 외국인 블로거 기자단을 발족해 각 나라의 언어로 인구주택총조사 시행을 알리고, 인구주택총조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인구주택총조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참여가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나의 참여가 나와 아이들의 미래, 이웃과 사회의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희망한다. 조사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때 성실하게 응답해, 나라살림을 올바르게 설계하고 지식기반사회 구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



강창익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
kc1777@korea.kr

그 길을 걸었다_순천만

삶의 길, 생명의 밭







비릿한 바람을 따라 순천만으로 간다. 차창을 열고 숨을 들이쉬는 때마다 갯갯들의 질척한 시냇냄새가 난다. 물이 나면 빨과 함께 살아온 순천만의 아낙들은 생계의 텃밭인 갯벌로 빨배를 밀고 나간다. 이들은 빨배에 몸을 맡기고, 한쪽 발로 푹푹 빠지는 빨을 밀어 십리도 가고 시오리도 간다. 찰지기만 한 순천만 갯벌에는 옹골찬 참꼬막이 널리고 널려서 한번 들어가 한 가마니쯤 캐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해질 무렵 빨밭에 나간 아낙들이 빨배를 타고 일제히 돌아오는 모습은 실로 아름다움을 넘어 감동스럽기까지 하다. 나는 너댓 시간을 기다려 이 감동스러운 풍경을 대포리 갯가에서 만났다. 먼 갯벌로부터 밀려들어오는 빨배 군단의 상륙작전은 용감했고, 누구랄 것도 없이 빨흙으로 뒤범벅된 삶은 숭고했다.

순천만은 고흥 쪽에 여자도라는 섬이 있어 고흥과 별교, 여수 쪽에서는 여자만이라 하고 순천에서는 순천만이라 한다. 순천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갈대밭과 앵무산에서 바라보는 S자 물길이다. 이 물길은 순천만의 풍부한 갈대밭 군락과 칠면초 군락 사이를 흘러 구불구불 갯벌을 따라간다.

사실 순천만의 매력은 동천, 서천(이사천)이 만나는 길목인 대대포구에서부터 시작된다. 대대포에서 화포 인근 갯벌까지 펼쳐진 이곳의 갈대밭과 칠면초 군락지는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 철새들의 가장 안전한 월동지이자 가장 풍족한 먹이창고다.

흔히 갈대는 강물과 바닷물이 어우러지는 접점 갯벌에서 적수가 없는 우점종(면집자주; 식물 군집 안에서 가장 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종)을 차지하고, 바다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가면 칠면초가 우점종을 차지한다. 칠면초는 한 해에 일곱 번이나 색깔이 변한다 해 붙여진 이름인데, 오랫동안의 침수와 건조 상태에서도 잘 자라 그 서식반경이 서남해에 두루 걸쳐 있다.

겨울이면 이곳에는 흑두루미를 비롯해 황새와 고니, 저어새는 물론 흰뺨검둥오리와 흑부리오리 등의 진객들이 찾아와 계절을 난다. 특히 최근에는 180여마리의 흑두루미떼가 순천만을 찾고 있어 새 전문가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대대포 인근 갈대밭에는 탐조를 위한 원두막 시설이 돼 있지만, 상당수의 탐조객들은 대대포에서 동력선을 타고 물길을 따라가며 철새들을 관찰한다.

그러나 새 전문가들은 탐조를 위한 동력선 운행에 반



1 전망대에서 바라본 S자형 해수로 일몰 경관. 사진으로 담으려는 관광객과 국내외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 순천만에는 약 350마리의 흑두루미가 10월 말 도래해 이듬해 3월까지 머물며 월동한다. 3 갈대군락을 포함한 염습지 생태계는 게, 재첩, 갯지렁이, 곤충, 어류, 조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한다.

대하고 있다. 동력선이 내는 엔진소리와 잦은 탐조운행은 그 자체로 새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빈번한 동력선 운행을 제한하거나 무동력선을 이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내가 처음 순천만을 찾은 것은 10년도 훨씬 전이다. 그때 벌교와 낙안읍성을 둘러보고 그냥 휙 지나친 곳이 순천만이였다. 예부터 남도에서는 벌교 가서 돈자랑, 주먹자랑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는 벌교가 여자만(순천만)과 포구를 끼고 있어 일제 때부터 보성과 승주, 고흥과 순천 일대의 교통 중심지이자 상업 중심지였으므로 제법 돈이 흔했고, 내로라하는 주먹들도 꽤나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순천 가서 인물자랑 하지 말고, 여수 가서 멋자랑 하지 말라는 말도 순천만이 가져온 풍요와 관련이 깊다.

순천만은 보성과 순천, 고흥과 여수 땅을 폭넓게 에두르며 물으로 우묵하게 들어와 있다. 바다이면서 빨밭인 순천만은 이곳 사람들에게 가도 가도 폭폭 빠지는 늪이 있지만, 퍼내도 퍼내도 줄지 않는 곳간이기도 했다. 하

지만 오늘날 순천만의 갯벌은 본래의 20%에 불과하다. 일제시대 때부터 간척사업을 벌여 갯벌을 들로 만들었고, 경제개발 시대에도 여기저기 갯벌을 매워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규모 간척사업은 대대포 쪽으로 흐르는 동천과 이사천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으며, 주변에 축사가 들어서면서 걸러지지 않은 가축분뇨가 그대로 하구와 갯벌로 흘러들고 있다. 순천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기름과 독성물질도 순천만을 위협하는 심각한 오염원이다.

지금까지 이 모든 오염원을 정화하고 하수처리장 노릇을 해온 것은 자연 그대로의 갈대밭과 칠면초 군락지였다. 그러나 언제까지 순천만이 거대한 자연의 정화조 노릇을 해줄지는 미지수다. 나라 경제

글 이용한 시인, 작가 / 사진 장병국

‘길 위의 시인’으로 지난 13년간 국내외 오지 혹은 섬을 떠돌며 글을 써왔다. 1995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수상했다. 시집 『안녕, 후두둑 씨』, 『정신은 아프다』, 여행에세이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길: 티베트 차마고도를 따라가다』, 『비림의 여행자: 길 위에서 받아 적은 몽골』 등을 펴냈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 부처 간, 지역 간 소통이 절실하다

최 근 각계각층에서 트위터 열풍이 불고 있다. 트위터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는 데 한몫했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소통수단으로 등장했다. 짧은 문구라도 계속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트위터가 갖는 이러한 소통의 기능이 요즘 정부 부처 간이나 공공기관, 지역 간에도 절실히 보인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 시행청인 국토해양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를 놓고 경상남도도 국토해양부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기도 하다.

국가재정은 중앙재정이든 지방재정이든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양 부문은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방정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거의 독자적으로 수립,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의 건설 및 유지·보수와 같은 동일 기능의 세출 간 연계가 미흡해 상위 도로와의 연계성 확보나 지역 간 연계도로망 구축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치단체 간에는 어떠한가? 인접한 자치단체 간에 유사·중복 시설의 난립이 심각하다. 서로 가까이 위치한 자치단체

상이한 부처 간, 상이한 지역 간에 소통을 통해 자발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제도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부처 간 연계·협력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거나, 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에 국고보조를 상향 조정해 주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 이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들이 체육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함께 계획을 세워 건립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운영도 내실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서로 다른 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여기저기 경쟁적으로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과 같은 소위 혐오시설은 극심한 남비(NIMBY) 현상으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분명 적합

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내몰린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당사자 간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부처의 입장, 자기 지역의 입장만 고집하고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물론 자기 입장도 중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가 판단 기준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방법 자체에도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하지만 트위터처럼 계속 마음을 열고 소통하다 보면 결국 합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상이한 부처 간, 상이한 지역 간에 소통을 통해 자발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제도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부처 간 연계·협력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거나, 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에 국고보조를 상향 조정해 주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 이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알차게 나라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다. 가정도 화목해야 보기 좋듯이, 국가도 모든 부처나 지역들이 서로 협력하며 성장할 때 국민들이 보기에 좋다. 나라경제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